

# 지하수법령 질의회신집

2014. 11





# 

I. 지하수개발·이용 허가/신고 .....	1
1. 온천 발견 신고에 따른 지하수 개발·이용 종료신고 .....	3
2. 굴착심도 변경 가능 여부 .....	4
3. 준공되지 않은 시설에서의 지하수 이용 .....	5
4. 지하수 개발의 거리 제한 (1) .....	6
5. 지하수 개발의 거리 제한 (2) .....	7
6. 지하수개발·이용 변경허가 대상 .....	8
7. 지하수의 개발 중지 여부 .....	9
8. 신고증 발급전 지하수개발 착공시 과태료 부과대상 여부 .....	10
9. 지하수개발·이용 시설의 지번 변경 .....	11
10. 지하수 개발·이용의 제한 (1) .....	12
11. 지하수 개발·이용의 제한 (2) .....	13
12. 지하수개발·이용시설 설치기준 .....	14
13. 토지소유자 사망시 토지를 사용·수익할 수 있는 권리 증명 서류 ....	15
14. 지열 이용시설의 지하수 허가·신고 기준 .....	16
15. 지하수개발·이용 허가·신고 판단 기준 .....	17
16. 공동우물 개발시 신고대상 여부 등 .....	18
17. 불법시설에서 지하수 이용 가능 여부 .....	19
18. 국유지의 토지사용 승낙 방법 .....	20
19. 먹는샘물 시설의 종료신고 .....	21
20. 허가시설의 신고시설 변경 .....	22
21. 토지사용 승락 취소시 지하수 시설의 처리 방안 .....	23
22. 지열 냉난방용 지하수 개발시 적용 규정 .....	24
23. 지하수 용도구분 .....	25
24. 지하수개발·이용 신고 대상 (1) .....	26
25. 지하수개발·이용 신고 대상 (2) .....	27
26. 지자체에서 지하수 개발시 인허가 .....	28

27. 지하수 배출시설의 인허가 .....	29
28. 허가받지 않은 시설에서의 지하수 이용 .....	30
29. 지하수 관측시설의 인허가 .....	31
30. 지적 분할로 인한 지번변경시 변경신고 여부 .....	32
31. 신고시설의 개발 제한 여부 .....	33
32. 지하수개발·이용 시설의 표준도 .....	34
33. 농·생검용 지하수개발·이용 신고시 추가제출 서류 .....	35
34. 하천부지내 지하수 개발·이용시 인허가 .....	36
35. 신고 위치와 다르게 지하수 개발시 처리방안 .....	37
36. 토지 지목에 따른 지하수 개발 .....	38
37. 공동소유지에서의 지하수개발·이용 신고 .....	39
38. 그라우팅 시공 방법 .....	40
39. 상수도 보급지역에서 지하수 개발 .....	41
40. 사용종료 된 온천시설을 지하수개발·이용 시설로 사용 .....	42
41. 지하수 변경허가 대상 여부 .....	43
42. 과거 인허가 대상에서 제외된 시설의 처리 방안 .....	44
43. 지하수 시설의 준공승인 시점 .....	45
44. 양수능력의 합산 .....	46
45. 토지 소유자와 건물 소유주가 다른 경우 토지사용 승낙서 .....	47
46. 경매로 인한 토지 소유주 변경시 소유권, 이용권의 주체 .....	48
47. 지하수개발·이용시설의 용도변경 .....	50

## II. 지하수 영향조사 ..... 51

1. 지하수 영향조사시 개발가능량 및 이용량 .....	53
2. 유효기간 연장허가 신청시 지하수 영향조사 항목 .....	54
3. 지하수 개발·이용 유효기간 연장 허가시 기준일 .....	55
4. 지하수 영향조사 중 우물현황조사 범위 .....	56
5. 지하수 개발·이용 유효기간 경과 시설의 처리 .....	57
6. 유효기간 경과시설의 연장허가 신청가능 여부 .....	58
7. 유효기간 연장허가시 수질검사 실시 여부 .....	59
8. 신고시설 신규개발로 인한 지하수 고갈시 영향조사 실시 여부 .....	60
9. 지열 시설의 연장허가를 위한 영향조사 실시 여부 등 .....	61

### Ⅲ. 유출지하수/굴착행위/사후관리 ..... 63

1. 유출지하수의 음용 가능 여부 .....	65
2. 유출지하수 이용계획 수립 여부 .....	66
3. 유출지하수 감소대책 신고 대상 .....	67
4. 준공 완료 후 유출지하수 이용계획 신고 대상 .....	68
5. 유출지하수 감소대책 신고 시점 등 .....	69
6. 굴착행위 신고 대상 여부 (1) .....	70
7. 굴착행위 신고 대상 여부 (2) .....	71
8. 굴착행위 신고 대상 여부 (3) .....	72
9. 굴착행위 신고 대상 여부 (4) .....	73
10. 굴착행위 중 온천이 발견된 경우 처리 방안 .....	74
11. 굴착행위 미이행시 처리방안 .....	75
12. 먹는샘물 시설의 사후관리 대상 여부 .....	76
13. 유효기간 연장허가시 사후관리 실시 여부 .....	77

### Ⅳ. 이행보증금/원상복구 ..... 79

1. 소유권 변경에 따른 이행보증금 승계 .....	81
2. 이행보증금의 납부 근거 및 반환 여부 .....	82
3. 명의변경시 이행보증금의 재예치 여부 .....	83
4. 이행보증금을 사용하여 원상복구하는 경우 .....	84
5. 굴착행위시 이행보증금 납부 여부 .....	85
6. 이행보증금 반환 및 원상복구 면제 대상 .....	86
7. 원상복구 의무자의 소재불명시 원상복구 주체 .....	87
8. 변경신고 미이행시 원상복구 여부 .....	88
9. 지반조사시 설치한 파이프 처리 .....	90
10. 원상복구 주체 (1) .....	91
11. 원상복구 주체 (2) .....	92
12. 원상복구가 불필요함으로 인정하는 서류 .....	93
13. 지하수 원상복구시 공무원 입회 여부 .....	94
14. 도로공사로 보상받은 지하수시설의 원상복구 의무자 .....	95
15. 도로공사로 소재불명된 지하수시설의 원상복구 처리 .....	96

16. 원상복구명령을 받은 시설의 용도변경 신고 가능 여부 .....	97
17. 미신고 시설의 원상복구 주체 .....	98
18. 토지 굴착공의 원상복구 명령 가능 여부 .....	99
19. 종료신고를 하지 않고 원상복구한 경우 처리방안 .....	100
20. 임의로 원상복구 한 시설의 처리 방안 .....	101
21. 소재불명 지하수 시설의 처리방안 등 .....	102
22. 원상복구 후 굴착행위 종료신고를 한 경우 처분 방안 .....	103

## V. 지하수 수질 ..... 105

1. 수질검사 미이행에 대한 과태료 부과 대상 .....	107
2. 정화시설 없는 지하수의 사용가능 여부 .....	108
3. 지하수의 용도구분 .....	109
4. 수질검사 부적합시 처리방안 .....	110
5. 지하수 수질검사서의 유효기간 .....	111
6. 소방용 지하수의 수질검사 면제 여부 .....	112
7. 지하수 오염방지 의무자 .....	113
8. 지열냉난방 시설의 용도 구분 .....	114

## VI. 시공업/영향조사기관/정화업 ..... 115

1. 자본금 평가 기준 .....	117
2. 지하수개발·이용 시공업의 등록 기준 (1) .....	118
3. 지하수개발·이용 시공업의 등록 기준 (2) .....	119
4. 지하수개발·이용 시공업의 등록 기준 (3) .....	120
5. 지하수개발·이용 시공업의 등록 기준 (4) .....	121
6. 토지 굴착을 위해 건설업 등록 필요 여부 .....	122
7. 타 지역에서의 시공업 등록 .....	123
8. 지하수 기술인력 .....	124
9. 시공업 장비 임대 .....	126
10. 시공업 변경등록 .....	127
11. 지열냉난방 시설의 착정공사에 필요한 자격 조건 .....	128
12. 펌프 설치·교체 공사에 필요한 자격 조건 .....	129
13. 시공업 대표자 변경 .....	130

14. 주된 사무소 이전시 행정처분 주체 .....	131
15. 사후관리 시행에 필요한 자격조건 .....	132
16. 온천공 개발공사 시행에 필요한 자격조건 .....	133
17. 영향조사기관 등록에 필요한 기술능력 .....	134
18. 기술인력의 중복 등록 등 .....	135
19. 영향조사기관의 기술인력 등록 .....	136
20. 영향조사기관의 등록 취소 사유 .....	137
21. 영향조사기관의 등록 취소 처분 주체 .....	138
22. 법정 교육 대상 .....	139

## VII. 불법 지하수 시설 ..... 141

1. 불법 지하수 시설 양성화 .....	143
2. 자진신고 시설의 현장 확인 .....	144
3. 불법 지하수 시설의 처리 .....	145
4. 미준공 시설 및 불법 굴착행위 시설의 자진신고 .....	146
5. 자진신고 처리 개수 .....	147
6. 불법 지하수 자진신고 조건 .....	148
7. 불법 지하수개발·이용에 대한 처리 방안 .....	149

## VIII. 지하수 개발·이용 부담금 ..... 151

1. 부담금 부과 근거 및 기준 .....	153
2. 부담금 부과 대상 (1) .....	154
3. 부담금 부과 대상 (2) .....	155
4. 부담금 부과 대상 (3) .....	156
5. 부담금 부과 대상 (4) .....	157
6. 부담금 이중과세 여부 .....	158
7. 통합 유량계 설치를 통한 부담금 산정 .....	159

## IX. 기타 ..... 161

1. 유량계 고장시 교체 절차 .....	163
2. 적산유량계 미설치에 대한 처벌 .....	164

3. 비상급수용 지하수 시설의 유량계 설치 여부 .....	165
4. 지하수 보전구역 지정 현황 .....	166
5. 온천원 보호지구에서 지하수의 공동 사용 .....	167
6. 먹는물 공동시설의 용도변경 등 .....	168
7. 지하수의 판매 .....	169
8. 환경영향평가와 다르게 지하수 개발시 처벌 방안 .....	170
9. 지하수개발·이용 공사시 지층 판단 기준 .....	171



지하수법령 질의회신집

I

---

---

## 지하수개발 · 이용 허가/신고

---

---



## 질의요지

- 지하수개발·이용시설 준공 후 온천 발견신고를 하였을 경우 지하수법에 의한 종료신고를 하여야 하는지?
- 종료해야 하는 것이 맞다면 종료신고를 하지 않은 자에게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는지? 과태료 부과시 지하수법에서 적용할 수 있는 조항은?

## 답변

- 지하수법에 따라 지하수개발·이용 허가/신고를 받은 후에 온천수가 발견되었을 경우에는 지하수법 제9조의3 규정에 의해 지하수개발·이용의 종료신고를 하고 온천법에 따라 인허가를 받아야 함
- 지하수법에 따라 종료신고를 하여야 하며, 종료신고를 하지 않은 자에게는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음. 그러나 계속해서 종료신고를 하지 않는다면 지하수법 제10조 제1항 제8호의 “허가를 받은 목적에 따른 개발·이용이 불가능하게 된 경우”를 적용하여 허가를 취소할 수 있음
- 한편, 지하수법 제39조 제4호 및 동 시행령 제44조에 따라 과태료의 부과기준은 별표 8과 같으며, 시장·군수·구청장은 위반행위의 동기·내용 및 횟수 등을 참작하여 별표 8의 부과기준에 따른 금액의 2분의 1의 범위에서 이를 가중하거나 경감할 수 있으며, 이 경우 가중하는 때에도 과태료의 총액은 법 제39조 및 제40조에 따른 과태료의 금액을 초과할 수 없음

## 관련법령

- 지하수법 제9조의3, 제10조, 제39조 및 제40조

## 2 굴착심도 변경 가능 여부

---

### 질의요지

- 지하수 준공시설의 굴착심도 변경(추가굴착)이 가능한지? 지하수 시설의 굴착심도에 대한 제한규정이 있는지?

### 답변

- 준공된 지하수개발·이용시설을 추가로 굴착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지하수법에 따라 변경허가(양수능력이 증가되는 경우에 한함)를 받거나 변경신고를 하여야 함. 즉, 지하수개발·이용시설이 허가대상일 경우에는 지하수법시행령 제11조에 따라 변경허가를 받고, 신고대상일 경우에는 지하수법시행령 제13조 제6항에 따라 변경신고를 하여야 함
- 한편, 현행 지하수법에는 굴착심도에 대한 별도의 제한규정은 없음

### 3 준공되지 않은 시설에서의 지하수 이용

#### 질의요지

- A는 B상가 목욕탕의 소유주로 B상가는 총43세대이며, 지하수 개발 토지는 입주자 공동 소유임. A는 지하수를 개발·이용 하고자 하며, 전체가 아닌 일부 토지사용승낙서만 첨부하여 준공 가능한 구비서류가 미비한 관계로 준공 처리가 되지 않음

이 경우 A가 미 준공된 지하수개발·이용시설의 지하수를 이용하였을 경우 가능한 행정처분은?

- 지하수를 계속 사용하는데 대한 하수도요금과 지하수이용부담금은 어떻게 하여야 하는지?

#### 답변

- 지하수법 제9조에 따라 준공신고를 하지 않고 지하수를 이용한 경우에는 지하수법 제40조 및 시행령 [별표 8]에 50만원의 과태료 부과 대상에 해당됨
- 지하수개발·이용부담금 부과·징수 대상은 지하수법 제30조의3 제1항에 의하면, 지하수법 제7조 및 제8조에 따라 허가를 받거나 신고를 하고 지하수를 개발·이용하는 자에게 부과·징수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음. 위 경우 신고인이 준공신고를 하지 않은 상태로서 원칙적으로 지하수를 이용할 수 없는 상태임

#### 관련법령

- 지하수법 제30조의3, 제40조

## 4 지하수 개발의 거리 제한 (1)

### 질의요지

- 가정용 지하수를 개발하여 이용하고자 본인소유 토지 내에 지하수개발·이용신고 후 인접대지 경계에 지하수를 굴착하였는데 너무 가까이 굴착하였다고 민원을 제기함

이에 지하수법에는 특별한 거리제한이 없다고 하니, 민법 제244조 규정에 의거 우물을 파거나 용수 등을 저치할 지하시설물을 하는 때에는 경계로부터 2미터 이상의 거리를 두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고 주장하고 있는데, 민법사항과는 해당이 없는지?

### 답변

- 지하수법 제4조(다른 법률과의 관계)에 의하면 “지하수의 조사, 개발·이용 및 보전·관리에 관하여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에는 그 법률이 정하는 바에 의한다. 다만, 제14조 내지 제16조의 규정은 그러하지 아니하다.” 라고 규정하고 있으므로, 지하수법 제14조 내지 제16조의 규정을 제외하고 다른 법률에서 지하수 개발 등에 관하여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에는 따라야 할 것으로 판단됨. 따라서 민법 제244조 제1항의 “경계로부터 2m 이상의 거리”를 두도록 하고 있는 규정은 지하수 개발시 따라야 할 것으로 판단됨

### 관련법령

- 지하수법 제14조, 제16조
- 민법 제244조

## 5 지하수 개발의 거리 제한 [2]

---

### 질의요지

■ 지하수 개발에 거리제한은 있는지?

### 답변

- 현행 지하수법에서는 하천인근에서의 지하수 개발시 하천관리청과의 협의규정, 동일사업장에서 2개 이상의 지하수 개발 및 50m이내에서 동일인이 2개 이상 지하수 개발시 양수능력 합산 규정이 있으며, 그 외 지하수개발·이용 시설 간에 거리제한은 별도로 규정하고 있지 않음
- 다만, 지하수법 제7조 제3항 각호의 경우에 해당되는 경우에는 허가대상 시설의 경우 허가를 하지 아니하거나 취수량을 제한 할 수 있으며, 신고대상 시설의 경우에도 지하수영향조사를 실시하여 취수량 제한 등의 조치를 할 수는 있음
- 또한 민법 제244조 제1항에 의하면, “경계로부터 2m 이상의 거리”를 두도록 하는 규정이 있음

### 관련법령

- 지하수법 제7조
- 민법 제244조

## 6 지하수개발·이용 변경허가 대상

---

### 질의요지

- 법 시행령 제11조제1항제3호(허가사항의 변경)와 관련하여 지하수개발·이용시설을 변경하는 경우 양수능력이 증가하는 경우로 한한다고 하였는데 양수능력은 변경하지 않고 굴착 깊이만 변경할 경우 지하수영향조사서를 첨부하여야 하는지?

### 답변

- 지하수법 시행령 제11조에 의한 허가사항의 변경 대상은 지하수의 개발·이용 용도를 변경하는 경우, 지하수개발·이용시설을 변경하는 경우(양수능력이 증가하는 경우에 한함)가 해당되므로, 질의내용과 같이 굴착 깊이만 증가되고 펌프마력, 양정고, 토출관 지름 등은 전혀 변경이 없었다면, 변경허가 대상에 해당되지는 않음



## 7 지하수의 개발 중지 여부

---

### 질의요지

- 지하수개발·이용 신고증 발급 후 지하수법 제8조 제3항에 해당되는 것으로 판단되어 시·군에서 지하수영향조사 결과가 나오기 전까지 관정 개발을 중지 시킬 수 있는지?
- 영향조사 결과에 따라 기존 수리된 허가량에 대하여 조정 또는 허가취소가 가능한지?

### 답변

- 지하수법 제8조 제3항에 의하면, 동법 제7조 제3항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시장·군수·구청장이 지하수영향조사를 실시하여 그 결과를 토대로 취수량 제한, 이용중지 등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으나, 지하수 영향조사결과가 나올 때까지 관정개발을 중지시킬 수 있는지 여부에 대하여는 지하수법에 강제 규정은 없음
- 기존에 허가받은 시설의 지하수개발·이용으로 인해 지하수법 제7조 제3항 각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취수량 제한 및 지하수법 제10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따라 허가의 취소가 가능함

### 관련법령

- 지하수법 제7조, 제8조, 제10조

### 질의요지

- 신고증이 발급되기 이전에 공사 착공을 했을 때 미신고시설로 과태료 부과 대상인지?
- 지하수 개발시 인근의 기존 지하수개발·이용자의 동의를 구해야 하는지?

### 답변

- 지하수개발·이용 신고대상인 경우 지하수법 제8조 제1항에 의하면,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제7조의 규정에 불구하고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미리 시장·군수·구청장에게 신고하고 지하수를 개발·이용할 수 있다.”라고 규정하고 있음

따라서 신고수리가 되지 않은 상태에서 지하수를 개발하였다면 이는 미신고 시설에 해당되는 것으로 보아 지하수법 제39조 제1호 및 제7의2호에 따라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 부과대상에 해당됨

- 지하수는 개인의 소유가 아닌 공적자원으로서 지하수법에 따라 허가를 받거나 신고를 하고 이용하는 것이며, 인근지역의 기존 지하수개발·이용자의 동의를 구하라는 규정은 없음

다만, 지하수의 개발·이용이 지하수법 제7조제3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될 경우에는 허가를 하지 아니하거나 취수량을 제한할 수 있으며, 신고대상인 경우에도 지하수법 제8조 제3항에서 규정하고 있는 바와 같이 시장·군수·구청장이 지하수영향조사를 실시하여 그 결과를 토대로 취수량 및 취수기간 제한 등의 조치를 취할 수 있음

### 관련법령

- 지하수법 제7조, 제8조

## 9 지하수개발·이용 시설의 지번 변경

---

### 질의요지

- 지하수개발·이용 신고증 발급 후 당초 신고한 지번에 개발 의사가 없고 다른 지번에 개발을 하고자 하는 경우 행정절차는?

### 답변

- 당초 신고서에 기재한 지번이 아닌 다른 지번에 지하수를 개발·이용하고자 하는 경우로서 지하수법 제8조 제2항에 의한 변경신고 대상에는 해당이 되지 않음

위의 경우 시·군에서는 당초 신고 건에 대하여는 지하수법 제8조의2에 따라 신고의 효력 상실 처리를 하고 신고인은 지하수를 개발·이용하고자 하는 새로운 지번에 다시 신고를 하면 가능함

### 관련법령

- 지하수법 제8조의2, 제22조

## 10 지하수 개발·이용의 제한 (1)

---

### 질의요지

- 사우나를 운영하는 사람으로서, 얼마 전 지하수개발·이용 신고 후 지하수 개발 중 바로 옆에 위치한 아파트 주민의 민원으로 잠시 공사를 중지하게 되었음

아파트 주민의 민원은 지하수를 파서 장기간 사용시 아파트의 침하가 생겨서 중지하라고 하는데 이에 대한 규정이 있는지?

### 답변

- 지하수법에는 지하수의 채취로 인하여 지반의 침하가 우려되는 경우에 지하수개발·이용의 허가를 하지 않거나 취수량을 제한 할 수 있는 규정을 두고 있음(지하수법 제7조 제3항에 시장·군수·구청장이 허가를 하지 아니하거나 취수량을 제한할 수 있는 경우는 “지하수의 채취로 인하여 인근지역의 수원의 고갈 또는 지반의 침하를 가져올 우려가 있거나 주변시설물의 안전을 해할 우려가 있는 경우” 등)

### 관련법령

- 지하수법 제7조

## 11 지하수개발·이용의 제한 [2]

---

### 질의요지

- 미신고 지하수 시설을 이용 중에 있는데 인근 대형관정 개발시 수량 고갈이 우려되는 바 대형 관정개발을 막을 수 있는 방법이 있는지?

### 답변

- 귀하의 관정 인근에 대형관정이 개발 예정인 경우, 대형관정이 지하수법에 따른 허가대상인지 신고대상인지 여부를 확인해야 할 것임. 만약 대형관정이 허가대상일 경우에는 지하수법 제7조에 따라 관정개발자는 지하수영향조사를 실시하여야 하며, 그 결과 지하수법 제7조 제3항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되면 시군에서는 허가를 하지 아니하거나 취수량을 제한할 수 있음
- 대형관정이 신고대상일 경우에도 지하수법 제7조 제3항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이 되면 시군에서 지하수영향조사를 실시하여 그 결과를 토대로 취수량 제한 등의 조치를 취할 수 있음
- 그러나 현재 미신고시설을 이용 중에 있는 경우에는 지하수법에 따른 법적 인 보호를 받을 수 없음

### 관련법령

- 지하수법 제7조, 제8조

### 질의요지

- 지하수법 시행규칙 5조제1항제1호 ‘가’에 의한 출수장치 및 적산유량계 설치 예외대상으로 30톤 미만 가정용, 국방용이라 명시되었는데 30톤 미만 농업용은 해당되지 않는지?
- 오염방지의무 및 수량 확인 등을 위해 표준시설도로 시공을 하여야 하나, 현장여건상 표준시설도의 기준에 약간 부족할 경우(예를 들어, 케이싱높이 30cm 미만, 상부보호공 80cm 미만 등) 준공이 될 수 없는지?

### 답변

- 농·어업용의 설치기준 완화 규정은 동 ‘나’목에 “정착된 동력장치를 이용하지 아니하는 농·어업용 지하수개발·이용시설의 경우”라고 별도로 명시하고 있음
- 지하수개발·이용시설의 설치도에 관한 사항은 지하수법 시행령 제8조 제3항에서 규정하고 있으며, 동 조항에서는 상부보호공의 높이 등에 대하여는 구체적으로 규정하고 있지 않음

다만, 지하수법 시행규칙 제8조 제5항에 의해 별표 2로 제시하고 있는 표준도는 이용자의 편의를 위해 제공하는 자료이며, 설치기준 등에 관한 구체적인 사항은 시장·군수·구청장의 소관 업무이므로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지하수담당자와 협의 하는 것이 바람직함

### 관련법령

- 지하수법 제8조
- 지하수법 시행규칙 제5조, 제8조

## 13 토지소유자 사망시 토지를 사용·수익할 수 있는 권리 증명 서류

---

### 질의요지

- 토지소유자가 사망하였을 때 지하수 개발 이용 신고시 제출되는 토지를 사용·수익할 수 있는 권리를 증명하는 서류는?

### 답변

- 토지소유자가 사망하였다면, 상속 등 권리승계인이 누구인지 확인하여 권리 승계인으로부터 토지사용승낙서 등을 받아 처리하면 가능하며, 토지소유자가 다수일 경우에는 가급적이면 토지소유자 전체로부터 토지사용승낙을 받는 것이 향후 있을지도 모르는 법적인 다툼 등에 대비할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됨

## 14 지열 이용시설의 지하수 허가·신고 기준

---

### 질의요지

- 지열을 이용하는 시설의 경우 지하수 허가, 신고 판단기준을 양수능력으로 하는지 아니면 실 이용량으로 해야 하는지?

### 답변

- 현행 지하수법상 지하수개발·이용의 허가/신고의 기준은 지하수의 실제 이용량이 아니라 양수능력, 토출관 직경 등 지하수 시설물의 설치 규모에 따라 결정되며, 지열을 이용한 냉·난방 시설 등에 대하여도 별도의 예외규정을 두고 있지는 않으므로 현행 지하수법 제7조 및 제8조의 규정에 따라야 할 것으로 사료됨

### 관련법령

- 지하수법 제7조, 제8조



## 15 지하수개발·이용 허가·신고 판단 기준

---

### 질의요지

- 지하수를 개발하였고, 개발한 지하수 양수능력이 100톤 이상이 되어 지하수법 제7조에 따라 지하수개발·이용의 허가를 받았는데, 실제 지하수 사용량은 100톤이 되지 않음

이러한 경우 동력장치 교체 없이 지하수 유효기간 연장 허가시 신고시설로 변경이 가능한지?

### 답변

- 현행 지하수법에는 허가, 신고대상의 판단기준을 굴착 깊이가 아닌 지하수의 수량을 객관적으로 표현할 수 있는 양수능력과 토출관 지름으로 규정하고 있으며, 허가대상 시설을 신고시설로 변경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지하수법 제7조제6항 단서의 규정에 따라 양수능력 변경 및 토출관 지름을 변경하여야 가능하며, 단지 취수량의 감소 또는 이용량의 감소의 이유로는 허가시설을 신고시설로 변경할 수는 없음

### 관련법령

- 지하수법 제7조

## 16 공동우물 개발시 신고대상 여부 등

### 질의요지

- 농촌 마을에서는 오래 전부터 땅을 파내려가 넓은 규격으로 돌을 쌓아올려 지하수를 이용하는 우물이 있는데 주민들이 공동으로 사용하고 있는 우물을 동력장치를 이용하여 사용하는 경우에 지하수법에 의거 신고대상이 되는지?
- 우물이 신고대상이 될 경우에 주민들이 공동으로 우물을 사용하고 있는데 이때에는 지하수개발·이용 신고인은?

### 답변

- 동력장치를 사용하여 공동 우물을 개발·이용하는 경우에는 지하수법에 따라 허가 또는 신고를 받아야 함
- 신고인은 지하수개발·이용자가 해당되나 개발·이용자가 다수인 공동우물의 경우 지하수법에 별도 규정사항은 없으며, 토지소유자 또는 지하수 시설에 대한 권리·의무 관계를 이행할 수 있는 자가 신고하는 것이 바람직함

### 관련법령

- 지하수법 제7조

## 17 불법시설에서 지하수 이용 가능 여부

### 질의요지

- 불법시설 사용으로 고발 처분된 관정을 지하수 영향조사 후 사용할 수 있는지? 아니면 원상복구 해야 하는지?

### 답변

- 허가대상의 경우 지하수법에 의해 허가를 받지 않고 사용하게 되면 지하수법 제37조 제2호에 의해 벌칙에 처하게 되며, 지하수법 제15조 제3항 제1호에 의해 시군에서는 원상복구를 명하여야 함

그러나 만약, 해당 시설이 신고대상일 경우에는 지하수법 제39조 제1호에 의해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는 부과되나 지하수법 제15조 제3항 제2호에 따라 시군에서 원상복구를 명하기 전에 지하수법에 따라 신고를 하게 되면 원상복구를 하지 않고 계속해서 지하수를 이용하는 것은 가능함

### 관련법령

- 지하수법 제15조, 제37조

## 18 국유지의 토지사용 승낙 방법

---

### 질의요지

- 농림수산식품부 명의로 되어있는 토지의 사용승낙서를 어디서 받아야 하는지?

### 답변

- 지하수개발·이용 신고시 제출하는 구비서류 중 지하수법 시행규칙 제8조 제3항 제1호의 “토지를 사용·수익할 수 있는 권리를 증명하는 서류”에 관한 것으로 판단되며, 이 경우 개인이 소유하는 사유지인 경우에는 일반적으로 토지사용승낙서 등을 구비하여 제출하면 가능하나, 국공유지를 포함하여 법률에서 정하고 있는 특정 용도구역일 경우에는 관련 법률에서 규정하고 있는 허가를 받아야 함

따라서 농림수산식품부 명의로 토지인 경우에도 관할지자체에서 먼저 지적도를 확인하고 지하수개발 행위를 하기 위한 절차를 문의하시면 될 것으로 판단됨

### 관련법령

- 지하수법 시행규칙 제8조

## 19 먹는샘물 시설의 종료신고

---

### 질의요지

- 먹는물관리법에 의하여 허가를 받은 샘물시설에 대하여 지하수법에 따라 종료신고 수리가 가능한지?

### 답변

- 먹는물관리법에 의해 샘물개발허가를 득한 경우로서 동 시설의 개발·이용에 대한 종료 행위 또한 지하수법이 아닌 먹는물관리법에서 정한 절차에 의해 이루어 져야 함

따라서 해당 시설의 인허가에 관한 행위는 먹는물관리법의 적용을 받으며, 종료행위는 먹는물관리법 담당기관에서 처리하여야 하며, 종료행위가 이루어진 이후에 원상복구는 지하수법 제15조에 따라 절차를 이행하면 됨

### 관련법령

- 지하수법 제15조

## 20 허가시설의 신고시설 변경

---

### 질의요지

■ 허가받은 지하수 시설을 신고시설로 전환하기 위한 조건은?

### 답변

■ 지하수법 제7조제6항 단서에 의하면, “허가받은 사항의 변경으로 인하여 해당 지하수개발·이용이 제8조제1항제2호 또는 제5호에 해당하게 되는 경우에는 제8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시장·군수·구청장에게 신고하고 지하수를 계속 이용할 수 있다” 라고 규정하고 있음

즉, 당초 허가받은 사항의 변경이 지하수법 제8조제1항제2호 또는 제5호에 해당되는 경우에는 신고시설로 변경이 가능함

### 관련법령

■ 지하수법 제8조

## 21 토지사용 승락 취소시 지하수 시설의 처리 방안

---

### 질의요지

- 토지소유주가 토지사용자에게 토지사용 승락 취소를 요구하는 경우 지하수 개발·이용 허가시설을 어떻게 처리해야 하는지?

### 답변

- 지하수법 시행령 제8조 제1항 및 동법 시행규칙 제6조 제1항에 따라 지하수개발·이용 허가를 받기 위해선 해당 시설물이 위치한 토지를 사용·수익할 수 있는 권리가 있어야 하므로, 질의한 사항이 기존 토지사용 승락의 효력 상실로 해당 토지를 사용·수익할 수 있는 권리가 없어진 상황이라면 더 이상 지하수개발·이용시설을 사용할 수 없으므로 지하수법 제10조 제1항에 따라 시장·군수·구청장이 그 허가를 취소할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됨

### 관련법령

- 지하수법 제10조
- 지하수법 시행령 제8조제1항
- 지하수법 시행규칙 제6조제1항

## 22 지열 냉난방용 지하수 개발시 적용 규정

---

### 질의요지

- OO섬 내에 공연장 냉난방을 위한 히트펌프가동을 위해서 부지 내 약 50m 천공을 한 후 지하수를 취수하여 냉방용 열원으로 사용하려 하는 경우 적용 받는 규정은?

### 답변

- 지하수를 취수하는 경우 지하수법에 따라 허가를 받거나 신고를 하여야 하며, 지하수법 제30조의3에 따라 지하수이용부담금 부과 대상시설에 해당됨  
위 지역이 하천구역에서 300m 이내의 지역이면서 지하수법에 의한 지하수 개발·이용 허가 대상에 해당된다면, 지하수법 제7조의2에서 규정하고 있는 바와 같이 하천관리청과 미리 협의를 하여야 함

### 관련법령

- 지하수법 제7조의2, 제30조의3



**질의요지**

- ▣ 지하수를 농업용과 생활용으로 동시에 사용할 때(농번기에는 농업용으로 사용하고, 농한기에는 생활용으로 사용) 용도 구분은 어떻게 하는지?

**답변**

- ▣ 위 경우에는 생활용으로 신고를 하고 신청서의 세부용도란에 농업·생활 겸용으로 하면 될 것으로 판단됨

※ 참고자료 : 지하수업무수행지침(2006, 건설교통부) 2-11쪽

“농업·생활겸용이란 농번기에는 농업용으로 사용하고 농한기에는 생활용으로 사용하는 시설을 말한다. 농어촌지역의 생활·농업 겸용으로 개발한 시설을 포함한다”

## 24 지하수개발·이용 신고 대상 (1)

---

### 질의요지

- 일일 취수량 150톤 이하 농업용 관정을 수중모터펌프가 아닌 외부에 동력장치(경운기 등)를 이용하여 이용할 경우 신고 대상인지?

### 답변

- 일일 양수능력이 150톤 이하의 농업용 관정(안쪽 지름이 50밀리미터 이하인 경우에 한함)에 해당되는 시설은 지하수법 제8조에 따라 신고 대상이며 지하수법에 따라 허가나 신고 없이 지하수를 개발·이용할 수 있는 경우는 지하수법 제7조제1항에 해당됨

### 관련법령

- 지하수법 제8조

## 25 지하수개발·이용 신고 대상 [2]

---

### 질의요지

■ 5m 굴착 후 모터를 사용하여 생활/농업용수로 사용시 신고 대상인지?

### 답변

■ 동력장치를 사용하여 지하수를 개발·이용하는 경우에는 지하수법에 따라 허가 또는 신고대상에 해당되며, 허가 또는 신고 예외 대상은 다음과 같음

※ 허가/신고 예외 대상

1. 자연히 흘러나오는 지하수 또는 다른 법률의 규정에 의한 허가·인가 등을 받거나 신고를 하고 시행하는 사업 등으로 인하여 부수적으로 발생하는 지하수를 이용하는 경우
2. 동력장치를 사용하지 아니하고 가정용 우물 또는 공동우물을 개발·이용하는 경우
3. 제13조제1항제1호의 규정에 의한 허가를 받은 경우

### 관련법령

■ 지하수법 제7조, 제8조

## 26 지자체에서 지하수 개발시 인허가

---

### 질의요지

- 지하수개발 허가권자인 시장·군수·구청장 명의로 지하수를 개발할 때 민원 접수 처리를 해야 하는지?
- 또한 준공신고를 하지 않은 건에 대하여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는지?

### 답변

- 지하수를 개발·이용하기 위해서는 허가권자의 경우에도 지하수법의 절차에 따라 허가를 받거나 신고를 하여야 함
- 시장·군수·구청장에 대한 과태료 부과건도 지하수법에는 별도의 예외규정을 두고 있지 않음

## 27 지하수 배출시설의 인허가

---

### 질의요지

- 건축물 부상 방지를 위해 지하수를 배출하는 경우 지하수법에 의한 조치를 취해야 하는지?

### 답변

- 건축물 부상 방지를 위해 지하수를 배출(1일 약 200톤)시키는 것이 지하수 시설을 별도로 설치하여 동력장치를 이용하는 경우라면 지하수법 제7조에 따라 지하수개발·이용 허가를 받아야 함
- 하지만, 자연히 흘러나오는 지하수 또는 다른 법률의 규정에 의한 허가·인가 등을 받거나 신고를 하고 시행하는 사업 등으로 인하여 부수적으로 발생하는 지하수를 이용하는 경우에 해당되는 경우라면 지하수개발·이용허가 예외대상에 해당됨

### 관련법령

- 지하수법 제7조

## 28 허가받지 않은 시설에서의 지하수 이용

---

### 질의요지

- 과거 수동펌프로 사용되었던 무허가 관정에 동력장치 등을 설치하여 사용하는 것이 가능한지?
- 적법하지 않을 경우 이에 대한 원상복구 및 과태료 처분이 가능한지?

### 답변

- 현장에서 지하수를 이용하기 위해 동력장치(모터) 등을 설치하였다면 지하수법에 따라 허가를 받거나 신고를 하여야 할 사항임
- 지하수법 제15조 제3항에 따라 지하수법 또는 다른 법률에 따라 지하수의 개발·이용에 관한 신고를 하여야 하는 경우 그 신고를 하지 아니한 자(원상복구명령을 하기 전에 계속하여 지하수를 이용하기 위하여 지하수법에 따라 신고한 자는 제외)에게 시장·군수·구청장은 일정기간을 정하여 원상복구를 명하여야 하며 지하수법 제39조 및 동법 시행령 제44조(별표7)에 따라 과태료 부과가 가능함

### 관련법령

- 지하수법 제15조, 제39조
- 지하수법 시행령 제44조

## 29 지하수 관측시설의 인허가

### 질의요지

- 정유회사 사업장 내에 직경 약 20cm, 깊이 약 30m의 관정을 뚫어 지하수를 끌어 쓰지 않고(동력장치 미설치), 단지 지하수 오염도 측정 목적으로 이용할 경우 지하수법에 의한 지하수개발·이용으로 볼 수 있는지?

### 답변

- 지하수법 제7조 및 제8조에 따른 지하수개발·이용의 허가 또는 신고 대상은 동력장치를 사용하여 지하수를 개발·이용하는 경우에 해당되며, 질의하신 사항과 같이 동력장치의 사용 없이 지하수의 관측·측정 목적만으로 굴착된 관정은 지하수법 제7조 및 제8조에 따른 지하수개발·이용의 허가 또는 신고 대상에 해당되지 않음

만일 지하수 관측·측정 목적의 굴착행위가 굴착지름 75mm 이상인 경우에는 지하수법 제9조의4 및 동법 시행령 제14조의3에 따라 굴착행위 신고 대상임

### 관련법령

- 지하수법 제7조, 제8조

### 질의요지

- 지적 분할로 인한 지번변경시 지하수법 제8조 제2항 및 시행령 제13조 제6항의 각호에 해당되지 아니하여도 변경신고가 가능한지?
- 기존 지하수 시설 바로 옆에 새로운 지하수시설 개발·이용 신고시 양수능력 범위 내에서 신고수리 가능한지?

### 답변

- 지하수법에 의해 지하수개발·이용시설의 변경허가 또는 변경신고를 하여야 하는 사항은 용도를 변경하는 경우와 시설을 변경하는 경우로 규정되어 있으며, 문의하신 사항과 같이 지적 분할에 의해 지하수개발·이용시설이 위치한 주소가 단순히 변경된 경우에 대해선 지하수법에 규정되어 있지 않음  
  
하지만, 토지의 분할로 인해 단순히 지하수개발·이용시설이 위치한 주소만 변경되었다면 지하수법 제8조 제2항을 준용하여 변경신고가 가능할 것으로 판단됨
- 신규 지하수개발·이용시설의 신고는 지하수법 제7조 제3항의 각호에 해당되지 않는 양수능력 범위 안에선 신규 시설의 개발·이용 신고 수리가 가능하며, 민법 제244조 제1항에는 ‘경계로부터 2m 이상의 거리’를 두도록 하는 규정이 있음

### 관련법령

- 지하수법 제8조
- 민법 제244조



## 31 신고시설의 개발 제한 여부

---

### 질의요지

- 지하수법 제7조제2항에 따르면 허가를 신청하려는 자는 지하수영향조사를 실시하여 주변 지하수에 미치는 영향을 평가토록 되어 있으나, 지하수법 제8조제10항에 따라 신고를 하려는 자는 지하수영향조사에 대한 의무 규정이 없음

이와 관련하여 지하수 신고시설을 개발하는 경우 주변 지하수를 고려하지 않고 개발할 수 있는지 여부?

### 답변

- 지하수법 제8조 제3항에 따라, 지하수 영향조사기관이 실시한 지하수영향조사를 받아 그 결과를 토대로 취수량 및 취수기간을 제한할 수 있으며, 시정 명령·이용중지명령 또는 공동이용명령 등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음

### 관련법령

- 지하수법 제7조, 제8조

### **질의요지**

- 지하수법 시행규칙 [별표2] 다형 표준도는 스크린 또는 스트레이너를 설치하지 아니하고 수중모터펌프를 사용하는 것으로 규정되어 있으나, 유공관을 설치하여 사용하는 것이 가능한지?

### **답변**

- 지하수법 시행규칙 [별표2]에 따라, 스크린 또는 스트레이너를 설치하고 수중모터펌프를 사용하는 경우는 「표준도(가형)」으로 설치할 수 있음

### **관련법령**

- 지하수법 시행규칙 [별표2]

### 질의요지

- 농업용 지하수개발·이용시설을 생활용으로 겸용하고자 할 때, 지하수개발·이용 신고에 대한 검토를 위해 시장·군수·구청장이 신고인에게 추가 제출서류를 요구할 수 있는지?

### 답변

- 지하수개발·이용의 인·허가권자인 시장·군수·구청장은 해당 지하수개발·이용의 적정성의 확인을 위하여 허가신청 또는 신고시 법령에서 정한 제출서류 외의 추가서류의 제출을 요구할 수 있을 것이나, 이는 추가 제출서류 없이는 허가·신고 요건의 적절성이 확인되지 않는 제한적인 경우에만 해당될 것으로 판단됨

## 34 하천부지내 지하수 개발·이용시 인허가

---

### 질의요지

- 하천 부지 내에서 굴착 후 지하수를 이용하는 것이 지하수법에 의해 적용 가능한지?

### 답변

- 지하수법 제4조에는 지하수의 개발·이용 등에 관해 다른 법률에서 규정하고 있는 경우에는 그 법률에서 정하는 바에 따르도록 규정되어 있으므로, 하천법에 의한 하천구역내의 물이용에 대해선 하천법에서 규정하고 있는 인·허가 사항을 따라야 할 것으로 판단됨

### 관련법령

- 지하수법 제4조

## 35 신고 위치와 다르게 지하수 개발시 처리방안

### 질의요지

- 신고 장소와 다른 곳에 개발된 지하수를 변경 신고하여 계속 이용할 수 있는지?
- 신고와 다른 장소에 개발한 지하수개발업체에 대한 처분 및 처분근거는?

### 답변

- 위치변경은 지하수법 제8조제2항 및 동법 시행령 제13조제6항에서 규정하고 있는 변경신고 대상에 해당되지 않으므로, 신고서와 다른 장소에 개발한 지하수 시설을 계속 이용하기 원한다면, 기존에 신고한 시설은 종료처리하고 다시 지하수법에 따라 신고를 하면 이용이 가능함

이 경우 지하수법시행령 제23조 제1항 제1호의 원상복구에외 규정을 적용하면 될 것으로 판단됨

- 신고서와 다른 장소에 지하수를 개발하는 행위는 원칙적으로 신고를 하지 않고 지하수를 개발하는 행위와 같다고 할 수 있으므로 준공신고시 위치확인 후 시정조치를 취해야 함

만약 시정명령을 이행하지 않았다면, 지하수법 제39조 제1호 및 제7의2호에 따라 신고인과 지하수개발·이용 시공업자는 과태료 부과대상에 해당될 수 있음

### 관련법령

- 지하수법 제8조제2항, 제23조, 제39조
- 지하수법 시행령 제13조제6항

### 질의요지

- 토지의 지목이 도로(사유지)인 경우 지하수 개발이 가능한지?
- 토지의 지목에 따른 지하수의 용도가 정해져 있는지?

### 답변

- 현행 지하수법에서는 토지의 지목에 따라 지하수 개발의 제한을 별도로 두고 있지 않으므로, 지하수개발·이용 허가 또는 신고 신청을 할 때 토지 지목이 도로인 경우에 도로점용허가 등 관련 법률에 따라 별도의 인허가를 받아야 하는지를 관할 지자체에서 안내를 받은 후 개발을 시행하는 것이 바람직함
- 지하수법에는 토지의 지목에 따라 지하수의 용도를 별도로 구분하지는 않으므로, 허가/신고 신청시 실제 이용하실 용도로 신청하면 됨

## 37 공동소유지에서의 지하수개발·이용 신고

---

### 질의요지

- 지하수 개발 신고시 공동소유토지인 경우 모든 공유자에게 승락을 받아야 하지만 공유자가 13명이나 되고 마을상수도를 설치 할 경우 대표자 이장님을 비롯해 일부만 받아도 되는지?

### 답변

- 귀하께서 질의하신 공유지분으로 되어 있는 토지에 지하수개발·이용 신고 시에는 토지소유자 모두의 동의가 필요함

## 38 그라우팅 시공 방법

---

### 질의요지

■ 지하수개발·이용시설 표준도상 그라우팅 시공의 상세 방법은 어떻게 되는지?

### 답변

■ 지하수법 시행규칙 제8조제5항과 관련한 [별표 2]에 의한 것으로, 총적층 및 미고결 암층을 대상으로 지하수를 취수하는 경우에는 외부케이싱 바깥쪽으로 5cm 이상 두께로 300cm 이상 심도까지 그라우팅을 실시하고, 암반층을 대상으로 지하수를 취수하는 경우에는 외부케이싱 바깥쪽으로 5cm 이상 두께로 암반선 이하 1m 이상 깊이까지 그라우팅을 실시하는 것이 원칙임을 알려드립니다

### 관련법령

■ 지하수법 시행규칙 [별표 2]



## 39 상수도 보급지역에서 지하수 개발

---

### 질의요지

- 건축물 내의 용수사용을 위해 배관설치 비용 문제로 지하수를 개발하고자 할 때, 상수도 보급지역이어도 개발이 가능한지?

### 답변

- 지하수를 개발·이용하고자 할 때는, 지하수법 제7조 및 제8조, 제13조에 의해 허가를 받거나 신고를 하면 누구나 지하수를 개발·이용할 수 있으므로 상수도 보급지역이어도 개발이 가능함
- 하지만 지하수법 외 「온천법」 및 「개발제한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특별조치법」 등에 의한 규제로 지하수개발·이용이 제한되는지는 해당법에 따라 검토한 후 개발하는 것이 바람직함

### 질의요지

- 수온 미달로 온천연장허가가 나지 않는 시설을 지하수개발·이용 시설로 사용이 가능한지?

### 답변

- 지하수법 제15조에 의해, 지하수법 또는 다른 법률에 따른 허가·인가 등이 취소되거나 개발·이용기간이 종료된 경우에는 해당 시설 및 토지를 원상복구 하여야 하나, 지하수법 시행령 23조에 의해, 지하수법 또는 다른 법률에 따라 허가·인가 등을 받거나 신고를 하고 계속하여 지하수를 개발·이용하는 경우는 원상복구를 하지 않을 수 있음

문의하신 시설이 온천법 및 다른 법률에 의한 인·허가 대상이 아니라면, 지하수법에 의해 허가를 받거나 신고를 하고 지하수를 이용하는 것이 가능함

### 관련법령

- 지하수법 시행령 제23조제1항

## 41 지하수 변경허가 대상 여부

---

### 질의요지

- 지하수 유효기간 연장허가 신청시 양수능력은 변경 없이 취수계획량을 줄여서 신청했을 때(600톤→300톤) 위 사항이 지하수법 시행령 제11조(허가사항의 변경) 및 지하수법시행규칙 제7조(허가사항의 변경 등)에 해당하는지?

### 답변

- 지하수개발·이용시설의 취수량 변경은 허가시설의 경우 지하수법 제7조 제6항 및 동법 시행령 제11조 제1항에 따른 변경허가 대상에 해당되지 않음

### 관련법령

- 지하수법 제7조제6항
- 지하수법 시행령 제11조제1항

## 42 과거 인허가 대상에서 제외된 시설의 처리 방안

### 질의요지

- 과거 인허가 대상에서 제외된 시설물 또한 인허가를 받아야 하는지?
- 지하수를 음용수로 이용하고자 할 경우 수질검사는 어떻게 해야 하는지? 수질검사 미이행에 대한 과태료가 있는지?

### 답변

- 2001년11월 개정된 지하수법 시행 이전까진 경미시설(1일 양수능력 30톤 이하의 양수능력을 갖는 시설)에 한하여 허가·신고 없이 지하수를 개발·이용할 수 있었으나, 이후에는 이러한 시설도 허가를 받거나 신고를 하도록 규정되어 있으므로, 현행 지하수법 제7조 제1항 각호에 해당되는 경우가 아니라면 지하수법에 따라 허가를 받거나 신고를 하여야 하는 사항임
- 지하수법에 따라 허가를 받거나 신고를 하고 지하수를 개발·이용 하는 경우 중 음용수를 사용할 경우에는 지하수법 제20조 및 동법 시행령 제29조에 따라 정기적으로 수질검사를 받아야 하며, 이를 이행하지 않을 때에는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음

### 관련법령

- 지하수법 제7조제1항, 제20조, 제39조
- 지하수법 시행령 제29조

## 43 지하수 시설의 준공승인 시점

---

### 질의요지

- 지하수법 제4조(다른 법률과의 관계)의 규정과 관련하여 건축법에 의한 허가·신고 등의 행정행위가 이루어진 후에 지하수 준공 승인을 하여야 하는지?

### 답변

- 지하수법 시행규칙 제14조 제3항 규정에 의해, 시장·군수·구청장은 준공 신고 된 지하수개발·이용시설이 당초 허가 또는 신고 내용에 따라 적합하게 설치되었다면 준공확인증을 발급하여야 함

다만, 해당 시설 중 다른 법률에 해당되는 사항이 있는 경우는 그 법률에 따라 처리되면 될 것으로 판단됨

### 관련법령

- 지하수법 제4조, 제14조

### 질의요지

- 양어장용으로 농·어업용 지하수 시설을 사용 중 수량 부족으로 인해 인근 농경지에 타인이 개발 중인 지하수 시설을 사용한다면 양수능력 합산대상에 해당되는지?

### 답변

- 지하수법 시행령 제13조 제5항 제2호에 의하면 “동일사업장 안에서 2개 이상의 지하수개발·이용시설을 설치하는 경우”에는 양수능력을 합산하여 허가/신고 기준을 판단하여야 함

이 경우 동일사업장이란 특정사업목적에 위해 필요로 하는 공간적 범위로서 지번이나 인위적 울타리 등만으로 획일적으로 그 범위가 확정되는 것이 아니라 사업의 인·허가시 설정된 범위, 당해 사업내용 등도 함께 고려하여 동일사업장으로 인식할 수 있는 공간적 범위라고 할 수 있음

따라서 위 경우, 양어장 인근에 2개의 지하수 시설을 동일 양어장에 용수를 공급할 목적으로 사용하고자 한다면, 지하수법 취지상 동일사업장으로 보아 양수능력을 합산하여야 할 것으로 판단됨

### 관련법령

- 지하수법 시행령 제13조

## 45 토지 소유자와 건물 소유주가 다른 경우 토지사용 승락서

### 질의요지

- 토지소유자와 건축물 소유자가 다른 집합건물인 경우 지하수시설 설치시 토지사용 승락서를 받아야 하는 범위는?

### 답변

- 지하수법 시행규칙 제6조 제1항 및 제8조 제3항에 따라 지하수개발·이용의 신고 및 허가를 위해선 해당 토지를 사용·수익할 수 있는 권리를 가지고 있어야 하며, 타인의 명의로 되어 있는 토지에 지하수를 개발하는 경우에는 해당 토지소유자로부터의 사용동의가 필요함

토지소유자와 건축물 소유자가 다른 경우 건축물 소유자의 동의도 필요하며, 건축물이 집합건물인 경우에는 「집합건물의 소유 및 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라 입주자대표회의 등의 동의가 필요할 것으로 판단됨

### 관련법령

- 지하수법 시행규칙 제6조제1항, 제8조제3항

### 질의요지

- 공매로 공장을 낙찰 받았는데, 전 소유주가 지하수는 매각대상에 없기 때문에 자신들의 소유권을 주장하며 이에 대한 금전적 보상을 요구하고 있음

낙찰자는 지하수를 사용할 일도 없고 폐공 후 그 자리에 공장을 지어야 하기에 철거요청을 했는데도 보상을 해주지 않으면 협조를 못해 주겠다고 한 후엔 연락이 두절된 상태인데, 이런 경우 지하수 허가권을 취소 또는 강제 허가권 변경이 가능한지?

### 답변

- 지하수의 관정이 있는 공장을 공매를 통해 매입한 경우 공장 소유권 이전에 따른 지하수 소유권 및 이용권에 관한 사항으로서, 먼저 공장 소유권 이전에 따른 부지 내 지하수 시설 소유권 및 보상 관계는 지하수법에서 규정하고 있는 사항은 아니며, 민법 등 타 법률의 규정을 따라야 하는 사항임

- 다만, 소유권과는 별도로 지하수법에서 규정하고 있는 지하수개발·이용권 관계를 알려드리면, 지하수의 이용권은 지하수개발·이용시설에 대한 명의자(허가를 받거나 신고를 한 자)에게 있으며, 사안의 경우는 지하수 시설이 있는 공장 소유권이 이전되었으나 명의변경은 이행하지 않은 경우로서 이전 소유자 및 귀하 모두 지하수를 이용할 권리는 없다고 할 수 있음(참고자료 : 대법원 판례)

- 이전의 공장 소유자(지하수개발·이용 명의자)가 지하수를 이용하기 위해서는 토지소유자인 귀하로부터 토지사용승낙을 받아야 하며, 귀하가 지하수를 이용하고자 한다면 명의변경 절차를 이행하여야 함

그러나 사안의 경우는 위 2가지 사항이 이행되지 않았기 때문에 인허가 관청인 시·군에서 지하수법 제10조 제1항 제8호 “허가를 받은 목적에 따른



개발·이용이 불가능하게 된 경우”를 적용하여 허가의 취소를 할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됨

## 관련법령

### ▣ 지하수법 제10조

※ 참고자료 : 대법원, 2001.10.23. 선고 99두7470 판결

#### 【판결요지】

자연히 용출하는 지하수나 동력장치를 사용하지 아니한 가정용 우물 또는 공동우물 및 기타 경미한 개발·이용 등 공공의 이해에 직접 영향을 미치지 아니하는 범위에 속하는 지하수의 이용은 토지소유권에 기한 것으로서 토지소유권에 부수(附隨)하여 인정되는 권리로 보아야 할 것이지만, 그 범위를 넘어선 지하수개발·이용은 토지소유권에 부수되는 것이 아니라 지하수의 공적 수자원으로서의 성질과 기능 등을 고려하여 행정청의 허가·감시·감독·이용제한·공동이용 명령·허가취소 등 공적관리방법에 의한 규제를 받게 하고 있다고 할 것이고, 따라서 이러한 규제의 범위에 속하는 지하수개발·이용권은 토지소유권의 범위에 속하지 않는 것이므로 지하수의 개발·이용허가를 받은 후 그 토지소유권이 이전된다고 하여 허가에 의한 지하수개발·이용권이 새로운 토지소유자에게 당연히 이전되는 것은 아니다.

## 47 지하수개발·이용시설의 용도변경

### 질의요지

- 농업용수 및 공업용수로 사용하기 위해 지하수를 개발·이용할 경우 농업용으로 지하수개발·이용 허가가 가능한지?
- 농업용수 목적의 지하수개발·이용 허가시설의 일부를 공업용수로 사용할 경우 변경허가 대상인지?

### 답변

- 지하수개발·이용의 용도는 지하수법 시행령 제8조의2에 따라 생활용수, 농업용수 및 농·어업용수로 구분하고 있으며, 농업용수 및 공업용수 사용을 목적으로 지하수를 개발·이용할 경우에는 용도를 「농업용수 및 공업용수」 겸용으로 허가를 득하거나 신고하여야 하며, 이 경우 수질검사는 「지하수의 수질보전 등에 관한 규칙」 제11조 별표4의 농·어업용수 및 공업용수 수질기준에 모두 적합하여야 할 것으로 판단됨
- 농업용으로 허가를 득한 지하수개발·이용시설의 일부를 공업용으로 사용할 경우에는 지하수법 제7조 제6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1조 제1항 제1호에 따라 용도를 「농업용수 및 공업용수」 겸용으로 변경허가를 득하여야 함

### 관련법령

- 지하수법 제8조의2

지하수법령 질의회신집 II

## 지하수 영향조사



### 질의요지

- 지하수 영향조사 수행시 유역 내 개발가능량 대비 이용량 산정은 그 백분율이 어느 정도로 산정 되어야 적절한지?
- 지하수 영향조사시 이용량이라 함은 그 유역 내 취수계획량(이용량)의 합계를 의미하는지 양수능력의 합계를 뜻하는 것인지?

### 답변

- “유역내 개발가능량 대비 이용량 산정시 그 백분율 산정의 적정성”은 국가에서 수립한 지하수관리기본계획 및 관할 지자체에서 수립한 지역지하수관리계획을 고려하여 판단함
- 양수능력이라 함은 “지하수개발·이용시설의 동력장치, 토출관의 지름과 깊이 등에 비추어 보아 당해시설을 이용하여 양수할 수 있는 최대취수량”을 의미하는 것으로서 허가, 신고 대상의 판단기준으로 사용되고 있으며, 실제 지하수개발·이용량을 의미하는 것은 아니므로, 지하수 영향조사를 위해 이용량 산정시 개발예정인 시설의 이용량은 양수능력을 적용하기 보다는 취수계획량을 적용하는 것이 적절하다고 할 수 있음

## 2 유효기간 연장허가 신청시 지하수 영향조사 항목

---

### 질의요지

- 지하수법시행령 [별표1]에 지하수개발·이용의 연장허가를 신청하는 경우 지하수영향조사서의 조사항목을 적정양수량 및 영향범위와 수질에 관한 사항으로 한정할 수 있도록 하고 있는데, 인허가권자가 지하수영향조사서를 심사함에 있어 수문지질 현황 및 원수의 개발가능량에 관한 사항을 보완토록 할 수 있는지?

### 답변

- 지하수 영향조사 항목 중 기존관정 이용현황과 물수지 분석, 잠재오염원 등은 기간 중 변동이 있을 수 있으므로 필히 조사해야 하나, 현행 지하수법에서 유효기간 연장시에 규정하고 있는 필수조사 사항이라 할 수는 없음
- 한편, 지하수개발·이용의 연장허가 신청시 지하수영향조사서 작성의 별도 규정은 없으므로 시행령 [별표2]의 규정에 따라 기존보고서를 참조하여 작성항목의 누락사항 없이 조사서에 포함하도록 할 수 있음

### 관련법령

- 지하수법시행령 [별표1], [별표2]

### 3 지하수 개발·이용 유효기간 연장 허가시 기준일

---

#### 질의요지

■ 지하수개발·이용허가 유효기간 연장허가시 기준일은 어떻게 되는지?

#### 답변

■ 지하수법 제7조의3 제1항은 지하수개발·이용허가의 유효기간을 5년으로 하고, 동법 시행령 제12조의3에서는 유효기간의 연장은 유효기간의 만료일 30일전까지 최근 6월 이내에 조사·작성된 지하수영향조사서를 첨부하여 시장·군수·구청장에게 제출하도록 하고 있음

이로 비추어 볼 때 유효기간을 연장하게 되면 당초 허가받은 5년이 경과된 다음날부터 5년이 연장되는 것으로 유효기간 연장허가의 기준일은 당초 허가기간의 만료일 다음날이 됨

#### 관련법령

■ 지하수법 제7조의3

■ 지하수법시행령 제12조의3

## 4 지하수 영향조사 중 우물현황조사 범위

---

### 질의요지

- 지하수영향조사시 우물현황조사의 수행범위에 미등록 불법시설도 포함해야 하는지?

### 답변

- 지하수영향조사시 우물현황조사의 수행범위는 지하수법 취지상 조사대상 지역에 있는 전체 지하수개발·이용시설을 대상으로 하고 있으나, 기존 지하수개발·이용시설 중 미등록된 불법시설로 인해 신규 개발예정 시설의 허가 신청량이 제한 받을 수 있으므로, 지하수영향조사기관이 실시하는 지하수영향조사서에 미등록 불법시설이 반드시 포함되어야 하는 항목은 아닐 것으로 판단됨



## 5 지하수 개발·이용 유효기간 경과 시설의 처리

### 질의요지

- 온천공 보호구역 지정신청 지역 200m 내에 위치한 지하수 3개 공이 합 200톤/일으로 생활용수 이용허가를 받았으나 지하수영향조사 유효기간이 지난 경우 이용중지(폐공)하는 것이 적법한지?

### 답변

- 지하수개발·이용허가의 유효기간은 지하수법 제7조의3에 따라 5년으로 정하고 있으며, 유효기간을 연장하고자 하는 경우는 지하수법 시행령 제12조의3에 따라 연장허가 신청을 하여야 함
- 유효기간 5년이 경과하였음에도 연장허가를 받지 않고 지하수를 이용하였다면 동 시설은 지하수법에 따라 허가를 받지 않은 불법시설로 간주되며, 만약 유효기간이 지난 이후에 허가를 받지 않고 지하수를 이용하였다면, 지하수법 제37조 제1호에 따라 벌칙이 부과되며, 지하수법 제15조 제3항 제1호에 따라 시장·군수·구청장으로부터 원상복구 명령을 받게 됨

### 관련법령

- 지하수법 제7조의3
- 지하수법시행령 제12조의3

## 6 유효기간 경과시설의 연장허가 신청가능 여부

---

### 질의요지

■ 지하수 개발 이용 유효기간 만료 후에도 연장허가 신청이 가능한지?

### 답변

■ 지하수법에 따라 허가를 받아 지하수를 개발·이용하는 자는 개발·이용 기간이 끝난 경우 지하수법 제15조에 따라 해당 시설 및 토지를 원상복구 하여야 하나, 질의 내용과 같이 지하수개발·이용 기간이 끝난 후 지하수를 계속 이용하고자 할 경우에는 해당 시·군·구로부터 다시 허가를 받거나 신고를 하면 지하수를 계속 이용하실 수 있사오니 자세한 사항은 해당 시·군·구와 협의하여야 할 것으로 판단됨

## 7 유효기간 연장허가시 수질검사 실시 여부

---

### 질의요지

■ 지하수 영향조사 유효기간 연장시에도 수질검사를 받아야 하는지?

### 답변

■ 현행 지하수법 시행령 제12조의3(지하수개발·이용허가 유효기간의 연장)에는 지하수 연장허가 신청시에 최근 6월 이내에 조사·작성된 지하수영향조사서를 첨부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며, 시행령 [별표 1]의 비고 2에는 지하수 연장허가 신청시의 조사항목 중에 수질에 관한 사항이 포함되어 있으므로, 기존에 시행한 수질검사의 유효기간이 남아 있더라도 연장허가 신청 당시 최근 6월 이내의 것이 아니면 지하수영향조사시 다시 수질검사를 받아야 함

### 관련법령

■ 지하수법 시행령 [별표 1]

### 질의요지

- 인근에서 신고시설을 신규로 개발한 이후로 이용 중이던 지하수가 고갈된 경우 신규시설에 대한 영향조사를 이행할 방법이 없는지?

### 답변

- 인근의 신규 지하수시설(신고대상)로 인해 귀하가 사용 중이던 지하수가 고갈된 경우라면 지하수법 제8조제3항 및 지하수법 제7조제3항에 따라 신고대상 시설이라 할지라도 시장·군수·구청장은 지하수영향조사기관이 실시한 지하수영향조사를 받아 그 결과를 토대로 취수량 및 취수기간 제한 등의 필요한 조치를 취할 수 있음

### 관련법령

- 지하수법 제7조3항, 제8조3항

### 질의요지

- 개방형 지열냉난방시스템 공사로 지하수개발·이용 허가를 득한 경우 유효기간 연장을 위해 지하수 영향조사를 받아야 하는지 ?
- 또한 사후관리를 받아야 하는 대상인지?

### 답변

- 개방형지열냉난방시스템 설치를 위해 지하수를 개발·이용하기 위해서는 지하수법에 따라 허가를 받거나 신고를 하여야 하며, 허가의 유효기간을 연장하기 위해서는 지하수영향조사를 실시하여야 함
- 현행 지하수법상 사후관리 대상에 해당되지 않음

### 관련법령

- 지하수법 시행령 제14조의4제4항



지하수법령 질의회신집

# Ⅲ

---

---

유출지하수 / 굴착행위 / 사후관리

---

---





### 질의요지

- 유출지하수를 정수처리 등 기타 필요한 조치를 한 후 음용으로 사용할 수 있는지?

### 답변

- 지하수법 제9조의2 유출지하수 관련 규정은 건축물이나 터널 등의 설치로 인해 유출지하수가 발생할 경우 감소 대책을 수립·시행하는 것이 우선이며, 감소대책에도 불구하고 일정 규모 이상으로 지하수가 유출되는 경우에 한하여 효율적 활용을 위해 이용계획을 수립함
- 유출지하수개발·이용 용도는 지하수법 시행령 제14조의2에서 생활용수 중 소방용·청소용·조경용 또는 공사용, 그 밖에 시장·군수·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용도로 규정하고 있으므로, 위 용도에 해당될 경우 음용수로의 사용은 음용수 수질기준을 충족하면 가능할 것으로 판단됨

### 관련법령

- 지하수법 제9조의2
- 지하수법 시행령 제14조의2

## 2 유출지하수 이용계획 수립 여부

### 질의요지

- 공사현장 중 유출지하수 발생량이 3,963.6㎥/일이고, 일 이용 계획량은 15.29㎥/일으로 유출지하수 개발·이용계획 신고서가 접수되어 있는 바, 발생량 비례 이용계획량이 현저하게 적어 이를 개선하도록 명령할 경우 기준이 모호하여 일일 발생량의 몇 % 이상을 이용계획 수립하여야 하는 기준이 별도로 있는지? 아니면 위와 같은 현황에도 신고 처리가 무방한 것인지?

### 답변

- 지하철·터널 등 지하시설물 또는 특·광역시에 21층 이상이거나 연면적 10만㎡ 이상인 건축물(이하 “유출지하수 발생시설”이라고 함)을 설치하려는 자는 지하수법 제9조의2 제1항에 따라 유출지하수 발생시설로 인한 지하수의 과다 유출을 방지하기 위해 유출지하수 감소대책을 수립·시행하여야 하며, 유출지하수 감소대책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유출지하수 관리 요령(2009년, 국토해양부)」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지하수법 제9조의2 제2항에 따른 유출지하수개발·이용계획에는 유출지하수 발생시설이 준공 후 동법 시행규칙 제9조의2 제2항에서 규정하고 있는 일정량 이상의 지하수가 유출될 때 신고하여야 하므로, 시공 중인 유출지하수 발생시설은 유출지하수개발·이용계획 신고대상에 해당하지 않고 유출지하수 감소대책을 수립·시행하여야 함

### 관련법령

- 지하수법 제9조의2
- 유출지하수 관리요령(2009년, 국토해양부)은 국가지하수정보센터([www.gims.go.kr](http://www.gims.go.kr))의 전문자료실에서 게시되어 있음

### 3 유출지하수 감소대책 신고 대상

---

#### 질의요지

■ 유출지하수 감소대책 수립 신고 대상에는 무엇이 해당되는지?

#### 답변

■ 지하수법 제9조의2 제1항 및 동법 시행규칙 제9조의2 제1·2항에 따라 유출지하수 감소대책 수립 신고 대상은 지하철역사·터널·전력구·통신구 1개소 당 1일 300톤 이상으로 지하수가 유출되는 경우, 특·광역시에 건설하는 건축물로서 그 층수가 21층 이상이거나 연면적이 10만제곱미터 이상인 건축물 1동당 1일 30톤 이상으로 지하수가 유출되는 경우에 해당됨

그 외의 시설에 대해선 지하수법에 규정하고 있는 유출지하수 감소대책 수립 신고 대상이 아님

#### 관련법령

■ 지하수법 제9조의2

## 4 준공 완료 후 유출지하수 이용계획 신고 대상

---

### 질의요지

- 지하수법과 관련하여 공사 시행 전에는 지하 유출수에 대한 이용계획을 해당 구청에 제출하지만, 준공 이후(주상복합 아파트) 지하 유출수를 이용하지 않는데도 지하수 유출을 감소시킬 수 있는 대책을 관할 구청에 신고해야 되는지?

### 답변

- 준공 후에는 유출지하수 감소대책을 구청에 신고하는 것이 아니라 일정규모 이상의 지하수가 유출되는 경우 이용계획을 수립하여 구청에 신고하여야 하며, 현행 지하수법에는 준공 후 일정규모 이상으로 계속 유출되는 지하수에 대하여는 그 이용을 의무화하고 있으므로 관할 구청에 이용계획을 수립하여 신고하여야 함

### 관련법령

- 지하수법 제9조의2제2항

## 5 유출지하수 감소대책 신고 시점 등

### 질의요지

- 유출지하수의 감소대책을 수립하여 지자체장에게 신고하여야 하는 시기는 언제인지?
- 유출지하수도 지하수개발·이용부담금을 납부해야 하는지?
- 유출지하수가 옥외의 토목 관로 중 오수관로가 아닌 우수관로에 연결하여 배출하더라도 하수도요금을 부과해야 하는지?

### 답변

- 지하수법 제9조의2 제1항에 따라 유출감소대책을 수립하여 신고하려는 자는 동법 시행규칙 제9조의2 제2항에 따른 기준 이상의 지하수가 유출되는 사실을 안 날부터 1개월 이내에 지하수 유출감소대책 신고서를 시장·군수·구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함
- 유출지하수는 지하수법 제30조의3에 따른 지하수개발·이용부담금 부과·징수 대상이 아님
- 하수도요금은 하수도법 및 지자체 조례에 따라 부과·징수되오니 해당 지자체 하수도 담당부서에 문의하시기 바람

### 관련법령

- 지하수법 제9조의2제1항, 제30조의3
- 지하수법 시행규칙 제9조의2제2항

## 6 굴착행위 신고 대상 여부 (1)

### 질의요지

- 비위생 매립지 환경오염 조사시 매립층 약 7m 이내로 환경질 측정, 오거를 통한 폐기물 시료채취 등의 행위를 할 경우 「지하수법」 제9조의4에 따라 굴착행위를 신고를 해야 하는지?
- 굴착행위 신고를 해야 한다면, 토지소유주가 다수일 경우 토지사용승낙서의 범위는?

### 답변

- 환경영향조사를 위한 시료채취 굴착행위가 지하수법에 의한 신고대상에 해당되는지 여부는 지하수법 시행령 제14조의4 제2항 제2호의 “굴착지름이 75밀리미터 이상인 지질·지하수조사”에 해당되는지 여부를 판단하여야 할 것이며, 만약 조사공의 굴착지름이 75밀리미터 이상인 경우에는 지하수법에 따라 굴착행위신고 대상에 해당되는 것으로 판단됨
- 굴착행위신고서의 첨부서류 중 “토지를 사용·수익할 수 있는 권리를 증명할 수 있는 서류”는 토지소유주가 다수인 경우 토지소유자 전체로부터 토지사용승낙을 받은 후 추진하는 것이 바람직할 것으로 판단됨

### 관련법령

- 지하수법 제14조의4

### 질의요지

- 지반조사를 위해 지름 51mm로 굴착시(공벽 붕괴방지를 위해 지름 3인치 (76.2mm) 케이싱을 심도 3m 깊이로 설치) 굴착행위신고 대상에 해당되는지?

### 답변

- 지하수법 시행령 제14조의3 제2항 제2호에 의하면, 지하수에 영향을 미치는 굴착행위 신고 대상은 굴착지름이 75밀리미터 이상인 지질·지하수조사가 해당됨. 즉, 지질(지반)조사공의 굴착지름이 75밀리미터 이상인 경우에는 굴착행위 신고를 하여야 한다는 것이며, 공벽붕괴 방지를 위해 지층 상층부에 케이싱을 설치하는 행위는 지하수법에 의한 굴착행위 신고대상에 해당되지 않음

따라서 위의 경우는 굴착지름이 51밀리미터인 지질(지반)조사 행위를 하는 것으로, 지하수법에 의한 굴착행위신고 대상에 해당되지 않는다고 판단됨

### 관련법령

- 지하수법 제14조의3

## 8 굴착행위 신고 대상 여부 (3)

---

### 질의요지

- 바다를 준설토로 매립한 지역에서 연약지반을 개량하여 단지를 조성하는 사업 중 지반조사를 위한 굴착시 지하수법에 따라 굴착행위 신고를 하여야 하는지?

### 답변

- 지하수법 제9조의4 제1항 제4호 및 동법 시행령 제14조의3 제2항 제2호에 의하면 지하수의 수량 또는 수질에 영향을 미치는 행위로서 굴착지름이 75밀리미터 이상인 지질·지하수조사(국방군사용인 경우는 제외)는 굴착행위 신고를 하여야 함
- 위의 경우 국방군사용인 경우를 제외하고는 별도의 예외규정을 두고 있지 않으며 굴착행위신고 제도 도입 취지로 볼 때 매립지에서 위에 해당하는 굴착행위를 할 경우에도 지하수법에 따라 굴착행위신고를 하여야 할 것으로 판단됨

### 관련법령

- 지하수법 제9조의4제1항
- 지하수법 시행령 제14조의3제2항



## 9 굴착행위 신고 대상 여부 (4)

---

### 질의요지

- 골재 채취를 하기 위해 시료 채취를 할 경우 굴착행위신고 대상에 포함되는지?

### 답변

- 문의하신 시료 채취가 지질·지하수 조사를 목적으로 지름 75mm이상의 굴착행위가 수반된다면 지하수법에 따른 굴착행위 신고를 하여야 할 것으로 판단됨

### 관련법령

- 지하수법 제9조의4

## 10 굴착행위 중 온천이 발견된 경우 처리 방안

---

### 질의요지

- 지하수법에 따라 굴착행위신고를 하고 굴착행위를 하던 중 온천이 발견되었을 경우 조치방법은?

### 답변

- 지하수법 제9조의4에 따라 지하수개발을 목적으로 굴착행위를 하다가 온천법 제2조제1호에서 정의하고 있는 온천이 발견된 경우에는 온천법 제12조 제4항 및 지하수법 제4조에 따라 온천굴착신고 등을 하여야 함

### 관련법령

- 지하수법 제4조
- 온천법 제12조제4항

## 11 굴착행위 미이행시 처리방안

---

### 질의요지

- 굴착행위 종료 예정일까지 착공되지 않은 굴착행위 신고 건에 대한 처리 방법은?

### 답변

- 지하수법 제9조의4에 따라 토지를 굴착하려고 할 때에는 굴착행위신고를 하여야 하며, 굴착행위를 종료한 경우에는 굴착행위 종료신고를 하여야 하며, 동법 제15조 제1항에 따라 해당 시설 및 토지를 원상복구 하여야 함
- 하지만 굴착공사가 이루어지지 않은 것은 굴착행위 신고를 취하하여야 할 사항으로, 토지를 굴착하지 않았으므로 굴착행위 종료신고의 의무는 없으며 굴착행위 종료 미신고에 따른 과태료 부과 대상도 아님

## 12 먹는샘물 시설의 사후관리 대상 여부

---

### 질의요지

- 먹는물관리법에 따라 허가를 득한 샘물도 지하수법에 의한 사후관리대상이 되는지?
- 사후관리 대상인 경우 어디에 문의를 해야 하는지?

### 답변

- 지하수법 제9조의5 제1항에 의하면 지하수법이 아닌 다른 법률의 규정에 의해 허가·인가 등을 받거나 신고를 하고 지하수를 개발·이용하는 경우에도 사후관리를 하도록 규정하고 있는바, 사안의 경우처럼 먹는물관리법에 의해 샘물(지하수) 허가를 받은 경우에도 지하수법 제9조의5에 따라 사후관리를 이행하여야 함
- 지하수개발·이용시설의 사후관리는 지하수법 제9조의5에 따라 지하수 업무를 담당하고 있는 시·군에서 처리할 사항임

### 관련법령

- 지하수법 제9조의5

## 13 유효기간 연장허가시 사후관리 실시 여부

### 질의요지

- 사후관리 대상 지하수 시설의 지하수개발·이용 허가 유효기간 연장시 사후관리를 필수적인 이행조건으로 하여야 하는지?
- 사후관리를 이행하지 않은 상태에서 유효기간을 연장하는 경우 어떻게 되는지?

### 답변

- 지하수개발·이용 허가시설의 경우 지하수법 제7조의3에 따라 허가의 유효기간은 5년이며 계속해서 지하수를 개발·이용하기 위해서는 5년마다 유효기간 연장 허가를 받아야 함  
  
또한 허가대상 시설의 사후관리 주기는 지하수법 시행령 제14조의4 제4항에 따라 2~5년으로 유효기간 연장과는 별개임
- 따라서 유효기간 연장시 사후관리를 필수적으로 이행조건으로 하여야 한다는 규정은 없지만 둘 다 기간에 맞춰 이행하여야 하는 사항임
- 유효기간은 연장하고 사후관리를 이행하지 않았을 경우 지하수법 제9조의5 제3항 및 동법 시행령 제14조의4 제2항에 따라 3월 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시정명령 또는 이용중지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할 수 있으며 이를 이행하지 않은 경우 지하수법 제39조 제5의2호에 따라 과태료 부과대상임

### 관련법령

- 지하수법 제7조의3, 제9조의5제3항, 제39조
- 지하수법 시행령 제14조의4



지하수법령 질의회신집 IV

이행보증금 / 원상복구





## 1 소유권 변경에 따른 이행보증금 승계

---

### 질의요지

■ 소유권 변경에 따라 이행보증금이 자동으로 승계가 되는지?

### 답변

■ 지하수법 시행규칙 제16조제3항에 의하면, 지하수개발·이용자의 명의를 변경된 경우 이행보증금이 양도·양수가 불가능한 보증보험증권 등인 때에는 다시 예치하도록 규정하고 있음

따라서, 이행보증금이 양도·양수가 가능하여 지하수개발·이용의 허가·인가 등을 받거나 신고를 한 자의 지위를 승계한 자가 예치한 이행보증금에 관한 권리를 승계한 경우에는 피 승계인이 예치한 보증금은 승계인이 예치한 것으로 볼 수 있으나, 이행보증금에 관한 권리를 양도받지 아니한 경우 또는 예치된 보증보험증권·유가증권 등이 양도·양수가 불가능한 것인 경우는 잔여기간 동안의 이행보증금을 다시 예치하게 하여야 함

### 관련법령

■ 지하수 업무수행지침(p.2-52)

## 2 이행보증금의 납부 근거 및 반환 여부

---

### 질의요지

- 이행보증금의 납부 근거는 무엇이며, 어떤 용도인지?
- 원상복구를 신고인이 시행하면 이행보증금은 신고인에게 반환되는지?

### 답변

- 지하수법 제14조, 시행령 제22조, 시행규칙 제16조에 근거하여 납부하며, 지하수법 제14조 제1항에 따라 원상복구 이행을 담보하기 위한 용도임
- 지하수법 시행령 제22조 제5항에 따라 원상복구의무자가 원상복구를 이행한 경우에는 이행보증금은 반환됨

### 관련법령

- 지하수법 시행령 제22조
- 지하수법 시행규칙 제18조

### 3 명의변경시 이행보증금의 재예치 여부

---

#### 질의요지

- 공사 착공일로부터 5년이 지났고 이행보증금 재예치가 필요치 않은 신고시설의 명의가 변경되는 경우 이행보증금을 다시 예치를 하여야 하는지?

#### 답변

- 지하수법 시행령 제22조 제3항의 단서 규정에 따라 시·군에서 검토한 결과 이행보증금을 계속 예치할 필요성이 없다고 판단할 경우에는 동조 제5항에 따라 이행보증금을 반환하면 되나, 이행보증금 제도의 취지를 고려할 때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계속해서 예치하게 하는 것이 바람직할 것으로 판단됨
- 시군에서 이행보증금을 반환한 이후 신고인의 명의가 변경된 경우에 변경신고인이 이행보증금을 다시 예치하여야 하는지 여부는 현행 지하수법에는 별도의 규정이 없으며, 제22조 제3항의 단서규정에 해당되는지 여부를 검토하여 시·군에서 판단하면 될 것으로 판단됨

#### 관련법령

- 지하수법 제22조제3항

### 질의요지

- 시장·군수·구청장이 원상복구 이행보증금을 사용하여 원상복구 하는 경우는?

### 답변

- 원상복구의무자가 원상복구를 이행하지 아니하여 시장·군수·구청장이 원상복구 명령을 하였음에도 원상복구를 이행하지 아니한 경우와 원상복구의무자가 불분명하여 지하수개발·이용시설 또는 토지의 굴착시설 등이 방치된 경우 시장·군수·구청장이 원상복구 이행보증금을 사용하여 원상복구 실시함

### 관련법령

- 지하수법 제15조제4항

## **5**    **굴착행위시 이행보증금 납부 여부**

---

### **질의요지**

- ▣ 지하수법 제9조의4에 따른 지하수에 영향을 미치는 굴착행위시 원상복구 이행보증금을 납부하여야 하는지?

### **답변**

- ▣ 지하수법 제14조제1항에 따라 지하수법 제9조의4에 따른 굴착행위 신고도 원상복구 이행보증금 예치 대상에 해당됨

### **관련법령**

- ▣ 지하수법 제14조제1항

### 질의요지

- 지하수이행보증금을 보험증권 또는 이행보증서로 예치하고 이행기간이 경과 (시행령 제22조제4항)되었는 바, 이 경우 예치금액인 보험료는 자동으로 소멸되는 것인지?
- 지역여건상 원상회복할 필요가 없다고 시장·군수·구청장이 인정하는 경우는 원상복구를 이행하지 않아도 되는데, 보금자리주택지구로 지정된 경우 원상복구를 아니하여도 가능한지?

### 답변

- 지하수법 시행규칙 제18조에 의하면, “이행보증금의 반환은 현금으로, 보증서·유가증권 등으로 예치한 경우에는 그 보증서·유가증권 등으로 반환하여야 한다.”라고 규정하고 있으므로 보증서·유가증권 등의 반환에 관한 사항은 일반적인 보험 등과 마찬가지로 개인이 보험사에 통보하여야 하는 사항일 것으로 판단됨
- 보금자리주택지구 등 사업시행으로 인해 폐공이 발생하는 경우에는 지하수법에 따라 원상복구를 하는 것이 바람직할 것으로 판단됨

### 관련법령

- 지하수법 시행규칙 제18조

### 질의요지

- 이행보증금 예치 후 신고인이 소재불명 등으로 원상복구를 실시하지 못할시 원상복구의 주체는? 이 경우 비용은 누가 부담하는지?
- 이행보증금 납부 후 예치기간이 5년으로 되어 있는데, 5년이 지난 후에는 어떻게 되는지?

### 답변

- 지하수법 시행령 제22조 제7항에 따라 시장·군수·구청장이 이행보증금을 이용하여 원상복구 의무자를 대신하여 원상복구 하거나 지하수법 제36조의 2에 따라 시장·군수·구청장이 대집행 후 그 비용을 위반자에게 징수함
- 이행보증금 예치기간 이후에는 이행보증금이 반환되며, 지하수법 시행령 제22조 제3항에 따라 시장·군수·구청장은 지역여건이나 지하수개발·이용 시설의 상태 등을 고려하여 특히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계속해서 이행보증금을 예치하게 할 수 있음

### 관련법령

- 지하수법 시행령 제22조

### 질의요지

- 신고된 지하수시설을 지하수법 제10조(허가의 취소 등)를 적용하여 신고 취소가 가능한지?
- 지하수 신고시설의 용도변경시 변경신고를 하지 않은 경우 원상복구를 해야 하는지?
- 원상복구 대상자가 원상복구 하지 않는 경우 강제로 시행할 수 있는지?

### 답변

- 지하수법 제10조(허가의 취소 등)는 동법 제7조에 따라 허가를 받은 지하수 개발·이용자가 각 호의 사유에 해당할 경우 그 허가를 취소하는 규정으로, 동법 제8조에 따라 신고를 한 지하수개발·이용자에게는 적용할 수 없음
- 지하수법 제8조에 따라 신고한 지하수개발·이용시설의 용도가 변경(음용수 사용여부의 변경을 포함)될 경우에는 지하수개발·이용자는 동법 제8조 제2항 및 동법 시행령 제13조 제6항에 따라 변경신고(용도변경)를 하여야 하며, 지하수개발·이용자는 지하수법 제15조 제1항 제3호부터 제5호에 해당될 경우 동법 제9조의3에 따라 종료신고 후 동법 제15조에 따라 해당 시설 및 토지를 원상복구 하여야 함
- 지하수법 제15조 제1항에 따른 원상복구의무자가 정당한 사유 없이 그 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시장·군수·구청장은 동법 같은조 제2항에 따라 일정한 기간을 정하여 원상복구를 명하여야 하며, 원상복구의무자가 원상복구 명령을 이행하지 아니하여 시급한 원상복구가 요청되는 경우 시장·군수·구청장은 지하수법 제15조 제4항에 따라 원상복구의무자를 대신하여 직접 해당 시설 및 토지를 원상복구 하여야 하고, 동법 제36조의2



에 따라 행정대집행법에 따라 대집행 후 그 비용을 명령위반자로부터 징수하여야 할 것으로 판단됨

## 관련법령

▣ 지하수법 제7조, 제8조, 제15조

## 9 지반조사시 설치한 파이프 처리

---

### 질의요지

- 지반조사시 설치한 파이프는 어떻게 처리해야 하는지? 지하수법에 관련 규정이 있는지?

### 답변

- 지하수법 제9조의4 및 동법 시행령 제14조의3에 따라, 굴착지름이 75mm이상인 지질·지하수조사시에는 굴착행위신고를 하여야 하며, 굴착행위가 종료된 경우에는 지하수법 제15조에 따라 해당 시설 및 토지를 원상복구 하여야 함(단, 굴착지름이 75mm 미만인 경우에는 해당되지 않음)

### 관련법령

- 지하수법 제9조의4
- 지하수법 시행령 제14조의3

## 10 원상복구 주체 (1)

---

### 질의요지

- 불법 지하수 관정이 포함된 토지를 매수한 경우 원상복구는 토지 매수자가 하여야 하는지?

### 답변

- 불법 지하수시설의 경우 지하수법에 따라 개발·이용자가 벌칙 또는 과태료를 받게 되고, 원상복구를 하여야 함

토지를 매수한 후 지하수를 이용하지 않았다면, 지하수법에 따라 개발·이용자인 매도자가 원상복구에 대한 책임이 있음

### 관련법령

- 지하수법 제15조

## 11 원상복구 주체 [2]

### 질의요지

- 아파트 시공회사로서 장기간 미사용 공에 대하여 관할 관청으로부터 원상복구 명령을 받았는데 관리사무소에서 일정기간 사용하였던 것으로 파악되나, 명확한 인수인계서는 없는 상황인데, 이 경우 원상복구의무자는 누구인지?
- 지하수를 사용하지 않은지 10년 이상 경과되었는데 의무가 있는지? 경감 규정은 없는지?

### 답변

- 원상복구 의무자는 지하수법 또는 다른 법률의 규정에 의해 허가를 받거나 신고를 하고 지하수를 개발·이용하는 자가 해당됨.  
따라서 관리사무소에서 명의변경을 하지 않았고 지하수 시설의 명의가 귀사로 되어 있다면, 원상복구의무자는 귀사가 해당될 것으로 판단됨
- 원상복구 이행에 대한 경감 사항은 별도로 규정하고 있지 않으며, 10년 이상이 경과되었더라도 원상복구 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원상복구를 이행하여야 함

### 관련법령

- 지하수법 제15조

## 12 원상복구가 불필요함으로 인정하는 서류

---

### 질의요지

- 지역여건상 원상복구가 필요하지 않음을 증명하는 서류는 누구로부터 인정 받아야 하는지? 수질기술사나 관련 박사학위를 가지고 있으면 가능한지?

### 답변

- 원상복구 예외규정 중 지하수법 시행령 제23조 제1항 제3호의 “지형여건상 원상복구 할 필요가 없다고 시장·군수·구청장이 인정하는 경우”에 대한 판단은 어떠한 자격기준(수질기술사, 수질박사)을 가진 자의 증명을 요하는 것이 아니라, 원상복구를 하지 않아도 원상복구의 목적이 달성될 수 있다고 시장·군수·구청장이 인정할 때 적용하는 것이라 할 수 있음

### 관련법령

- 지하수법 시행령 제23조

### 13 지하수 원상복구시 공무원 입회 여부

---

#### 질의요지

■ 지하수 원상복구시 지하수 담당 공무원의 입회가 없을 경우 불법인지?

#### 답변

■ 지하수 원상복구시 공무원의 입회에 대한 사항은 지하수법에서 규정하고 있지 않음

### 질의요지

- 공공기관 발주로 도로공사에 편입되어 보상처리 된 농업용 소형관정에 대한 폐공(원상복구) 처리 의무자는?

### 답변

- 도로공사가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이하 ‘공토법’)'에 의한 공익사업에 해당되는 경우는 공토법 제2조, 제4조 및 민법 제187조의 규정에 의해 등기를 요하지 아니하는 부동산물권변동, 즉 법률의 규정에 의한 부동산물권변동에 해당이 될 수 있으며, 원상복구는 변경된 신고인의 의무 이행사항으로 판단됨
- 따라서 변경된 신고인이 발주청·시공사 중 어디로 되어 있는지를 관할 지자체에 확인하여 판단하는 것이 바람직함

### 관련법령

-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제2조, 제4조
- 민법 제187조

### 질의요지

- 지하수개발·이용시설이 있던 부지가 도로부지로 편입되어 종료신고 및 원상복구 절차없이 도로공사를 시행하여 시설확인이 되지 않아 원상복구처리가 불가능 할 경우 행정처리 절차는?

### 답변

- 지하수개발·이용 종료신고를 하여야 하며, 지하수법 시행령 제23조 제1항 제3호 지형여건상 원상복구 할 필요가 없다고 시장·군수·구청장이 인정하는 경우에 해당하는지는 현지 여건을 고려하여 시·군에서 판단하면 될 것으로 판단됨

### 관련법령

- 지하수법 시행령 제23조



### 질의요지

- 신고인이 원상복구명령을 받고 난 후 원상복구명령 기한 내 사용용도를 음용에서 비음용으로 변경해서 이용한다고 하면 변경처리가 가능한지? 가능하다면 변경신고서의 구비서류(변경내용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는 무엇인지?
- 원상복구 의무자가 정당한 사유없이 그 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한 때에는 일정한 기간을 정하여 원상복구를 명한다고 되어 있는데, 상기와 같은 내용도 ‘정당한 사유없이 원상복구 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한 경우’로 볼 수 있는지?
- 지하수 기득권을 신고시점으로 봐야 하는지 아님 준공시점으로 봐야 하는지?

### 답변

- 당초 음용수로 신청한 것이 수질불량으로 원상복구 사유에 해당되어 원상복구명령을 한 경우 원상복구명령 기간 동안에 용도를 비음용으로 변경하여 당초 원상복구 사유인 수질불량이 해소되는 경우라면 용도변경이 가능할 것으로 사료되며, 변경신고시 구비서류는 생활용 수질검사 성적서를 제출하면 됨
- 수질불량의 경우 지하수법 제15조 제1항 제4호에 따라 원상복구 사유에 해당이 되며, 이를 이행하지 않을 경우에는 지하수법 제15조 제2항에 따라 시장·군수·구청장은 원상복구를 명하여야 함
- 지하수의 사용 시점에 관한 문의로 보여지는 바, 지하수의 사용 가능시점은 준공검사가 완료된 이후에 가능함

### 관련법령

- 지하수법 제15조

## 17 미신고 시설의 원상복구 주체

### 질의요지

- 토지 및 건물에 대한 보상을 실시하면서 원상복구의무자가 불분명한 불법 지하수 시설이 발견된 경우, 신고나 허가시설이 아니라면 발견된 방치공의 원상복구의 주체는 누구인지?
- 발견된 관정의 심도가 크지 않은 경우 원상복구의 절차와 방법은 어떻게 되는지?

### 답변

- 지하수법 제15조 제4항 제2호의 “원상복구의무자가 불분명하여 지하수개발·이용시설 또는 토지의 굴착시설 등이 방치된 경우”는 원상복구의무자를 대신하여 시장·군수·구청장이 원상복구를 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므로, 위와 같이 원상복구 의무자가 불분명한 불법시설의 경우에는 시장·군수·구청장이 원상복구의무자를 대신하여 원상복구를 하여야 하는 경우에 해당될 것으로 사료됨
- 원상복구 절차 및 방법은 지하수법시행령 제24조 제4항에서 규정하고 있으며, 이에 대한 세부절차는 우리부에서 2006년도에 발간한 지하수업무수행지침을 참고하기 바람

### 관련법령

- 지하수법 제15조, 제24조

## 18 토지 굴착공의 원상복구 명령 가능 여부

### 질의요지

- 지하수개발·이용허가를 받기위해 굴착행위 신고하고 굴착된 지하수공을 오염물질이 들어갈 수 없게 봉인 하고 장기간 방치할 경우 지하수법에 따른 원상복구명령이 가능한지?

### 답변

- 지하수개발·이용 허가 절차를 이행하지 않고 장기간 방치하게 된 경우라면 지하수법 제15조 제1항 제5의2호에 따라 굴착행위가 종료된 것으로 보아 원상복구를 하여야 함

이 경우 정당한 사유 없이 원상복구를 이행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지하수법 제15조 제2항에 따라 시장·군수·구청장은 일정기간을 정하여 원상복구를 명하여야 함

- 한편, 굴착행위 신고 후 토지의 굴착행위만 하고 지하수영향조사를 실시하지 않고 장기간(신고서상 원상복구 예정일 이후까지) 방치한 경우라면, 당초 신고 목적을 달성할 의사가 없는 것으로 판단이 되므로 지하수법 제15조 제1항 제5의2호에 따라 굴착행위가 종료된 것으로 보아야 할 것임

### 관련법령

- 지하수법 제15조

## 19 종료신고를 하지 않고 원상복구한 경우 처리방안

---

### 질의요지

- 사용하지 않는 지하수 관정에 대하여 종료신고를 하지 않고 되메움 한 경우 어떻게 처리해야 하는지?

### 답변

- 지하수개발·이용을 종료한 경우에는 지하수법 제9조의3에 따라 지하수개발·이용의 종료신고를 하여야 하며, 질의와 같이 종료신고 절차 없이 되메움을 이미 행하였다면 지하수법 제39조 제4호의 지하수개발·이용의 종료신고를 하지 아니한 자에 해당되어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 부과대상에 해당됨

### 관련법령

- 지하수법 제9조의3, 제39조제3호

### 질의요지

- 적합한 절차에 의하지 않고 임의로 원상복구 한 시설에 대해 어떻게 처리해야 하는지?

### 답변

- 지하수의 원상복구는 지하수법 시행령 제24조에 따라 이행하여야 하며, 만약 위와 같이 적법하게 원상복구가 이루어지지 않았다면, 해당 지하수개발·이용자에게 적법하게 원상복구를 하도록 시장·군수·구청장이 명령을 내릴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됨

### 관련법령

- 지하수법 시행령 제24조

## 21 소재불명 지하수 시설의 처리방안 등

---

### 질의요지

- 과거 신고 후 사용되었던 지하수 시설이 현재 소멸되어 버린 경우, 이 시설을 어떻게 처리해야 하는지?
- 원상복구를 시공업자가 아닌 이용자 본인이 직접 시행한 경우 벌칙 적용이 가능한지?

### 답변

- 소멸된 시설물에 대해선 지하수개발·이용의 종료신고를 접수받아 행정처리하는 것이 타당할 것으로 판단되나, 소멸된 지하수개발·이용시설은 해당 토지 및 시설물이 적절히 원상복구 되었는지 등 현장상황과 사실관계를 확인하여 조치하여야 할 것으로 사료됨
- 지하수개발·이용시설을 지하수개발·이용 시공업자가 아닌 자가 원상복구(1일 양수능력이 30톤 미만이고 굴착 지름이 75밀리미터 이하인 지하수개발·이용시설의 원상복구공사 등은 제외) 하였다면 이는 지하수법 제37조 제5호에 따라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할 수 있음

### 관련법령

- 지하수법 제9조의3, 제37조제5호

### 질의요지

- 원상복구를 미리 시행한 후 굴착행위종료신고서를 나중에 제출한 경우 신고 없이 사전에 인발한 것이므로 지하수법 제39조제5호 규정에 의한 과태료 부과를 할 수 있는 것인지?

### 답변

- 지하수법 시행규칙 제9조의4 제4항에 의하면, 지하수에 영향을 미치는 굴착행위의 종료를 신고하고자 하는 자는 원상복구계획서 및 신고증을 첨부하여 굴착행위종료신고서를 제출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므로, 원상복구를 이행하기 이전에 굴착행위종료신고를 하여야 하며, 사전에 종료신고를 하지 않은 경우는 지하수법 제39조 제5호 규정에 의한 과태료 부과대상에 해당됨

### 관련법령

- 지하수법 제39조





지하수법령 질의회신집

V

## 지하수 수질



## 1 수질검사 미이행에 대한 과태료 부과 대상

---

### 질의요지

■ 지하수 수질검사 불이행에 따른 과태료는 누구에게 부과되는지?

### 답변

■ 지하수 수질검사 불이행에 따른 과태료는 지하수개발·이용시설의 명의자에게 부과됨

## 2 정화시설 없는 지하수의 사용가능 여부

---

### 질의요지

- 지하수를 개발하여 사용하려고 하는데, 정화시설 없이 생활용수로 사용할 수 있는지? 불가능하다면 사용할 수 있는 방법은?
- 지하수 수질기준 및 관련 법규는 어디에 있는지?

### 답변

- 지하수 시설 규모가 허가대상인지 신고대상인지를 판단하여 관할 시군의 허가(지하수법 제7조 관련)를 받거나 신고(지하수법 제8조 관련)를 하고 지하수법에서 규정하고 있는 용도별 수질기준, 시설물 설치기준 등을 충족하면 정화시설 없이 가능할 것으로 사료됨
- 지하수의 수질기준은 “지하수의 수질보전 등에 관한 규칙(환경부령 제362호)”의 제10조에 수질검사 대상을 규정하고 있으며, 동 규칙 제11조에 용도별 수질기준을 규정하고 있음

### 관련법령

- 지하수의 수질보전 등에 관한 규칙 제10조, 제11조

### 3 지하수의 용도구분

---

#### 질의요지

- 단독주택의 신축건물에서 상수도를 이용하지 않고 지하수를 개발할 경우 지하수 외 식수공급이 불명확한 상태일 경우, 용도 분류를 꼭 음용수로 하여야 하는지?

#### 답변

- 상수도 이용 없이 지하수를 유일한 생활용수로 이용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음용으로 처리하는 것이 바람직할 것으로 판단되나, 귀하의 질의내용으로 볼 때 지하수를 제외한 식수공급이 “불명확”한 상태만으로는 지하수의 용도를 “음용”으로 하도록 강요할 수 있는 규정은 없음

## 4 수질검사 부적합시 처리방안

---

### 질의요지

- 지하수 개발 후 정기 수질검사에서 부적합 판정시 어떻게 처리해야 하는지?  
재검사가 가능한지?

### 답변

- 정기 수질검사 결과 부적합으로 나온 경우, 지하수법 제20조 제2항에 따라 환경부장관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은 이용중지 또는 수질개선 등 필요한 조치를 명하게 되며, 이 경우 수질개선 조치 이후에도 지하수 수질검사 결과 부적합으로 나올 경우에는 허가 취소 또는 원상복구를 하여야 함
- 현재 개발·이용 중인 시설이 허가대상일 경우에는 지하수법 제10조 제1항 제7호의 “수질불량으로 지하수를 개발·이용할 수 없는 경우”에 해당되어 허가 취소 사유에 해당이 되며, 신고대상일 경우에는 지하수법 제15조 제1항 제4호의 “수질불량으로 지하수를 개발·이용할 수 없는 경우”에 해당되어 원상복구 대상이 됨

### 관련법령

- 지하수법 제10조, 제15조

## 5 지하수 수질검사서의 유효기간

---

### 질의요지

- 지하수개발·이용 시설의 준공신고시 첨부되는 수질검사서의 유효기간이 정해져 있는지?

### 답변

- 지하수개발·이용 시설의 준공신고시 제출하는 수질검사서의 유효기간에 대해서는 지하수법에서 특별히 규정된 바는 없으나, 지하수법 시행규칙 제9조 제2항 제2호에 준공신고시 수질검사서를 준공신고일 이전 최근 6개월 안에 지하수영향조사서의 수질검사서로 대체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는 점으로 미루어 최근 6개월 이내의 수질검사서로 인정해야 할 것으로 판단됨

### 관련법령

- 지하수법 제9조제2항제2호

## 6 소방용 지하수의 수질검사 면제 여부

---

### 질의요지

- 생활용수로 신고하고, 실질적으로 소방용으로만 사용 중인 지하수의 경우 수질검사 면제가 가능한지?

### 답변

- 지하수의 수질보전 등에 관한 규칙 제10조 및 제12조에 의해, 생활용수로써 일 양수능력이 30톤 이상으로 허가를 받거나 신고된 지하수 시설은 3년의 한번 씩 정기수질검사를 받아야 하나, 청소용·조경용·공사용·소방용 등 보건위생과 생태계 보전 등에 지장이 없는 용도로 이용하는 생활용수의 경우는 정기수질검사에서 제외되므로, 문의하신 지하수 시설이 생활용의 소방용인 경우 정기수질검사 대상에서 제외됨

### 관련법령

- 지하수의 수질보전 등에 관한 규칙 제10조, 제12조



## 7 지하수 오염방지 의무자

---

### 질의요지

■ 지하수법시행령 제25조 제4항의 지하수 오염방지 의무자는 누구인지?

### 답변

■ 지하수법 시행령 제25조 제4항의 지하수오염방지의무자는, 지하수법 제16조 제1항에 따라 “이 법 또는 다른 법률의 규정에 의하여 허가·인가 등을 받거나 신고를 하고 지하수를 개발·이용하는 자(제13조의 규정에 의한 허가를 받고 동조 제1항 각호의 1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는 자를 포함)”를 의미함

### 관련법령

■ 지하수법 제16조제1항

### 질의요지

- 지열냉난방시설에서 지하수를 개발하여 시설채소를 재배하는 경우 지하수의 용도는 어떻게 해야 하는지?
- 지열냉난방시설의 경우에도 5년마다 연장허가를 받아야 하는지?

### 답변

- 지하수법의 용도 정의로 볼 때 질의하신 ‘시설채소를 재배하기 위한 지열냉난방시설’에 사용되는 지하수는 농·어업용수에 해당된다고 판단하는 것이 바람직함
- 현행 지하수법에서 지하수개발·이용시설이 허가대상일 경우는 지하수법 제7조의3에 규정하고 있는바와 같이 유효기간을 5년으로 하고 있으며, 연장을 하고자할 경우에는 연장허가를 받도록 규정하고 있으며, 질의하신 지열냉난방시설에 대하여도 별도의 예외규정을 두고 있지는 않으므로 5년마다 연장허가를 받아야 함

### 관련법령

- 지하수법 제7조의3

지하수법령 질의회신집

VI

---

---

시공업 / 영향조사기관 / 정화업

---

---



## 1 자본금 평가 기준

---

### 질의요지

- 지하수개발·이용 시공업의 등록시 현재의 법인등기부의 자본금과 직전 회계연도의 대차대조표의 자본금이 상이 할 경우 어떤 것을 기준으로 하여야 하는지?

### 답변

- 지하수법 시행령 [별표4]의 지하수개발·이용 시공업 등록기준 제2호에 의하면 “법인의 자본금은 5천만원 이상이어야 하며, 주식회사의 경우 납입자본금을 말한다.” 라고 규정하고 있음.

위와 같이 직전회계연도 대차대조표 발표 이후 증자 등을 통해 자본금이 증액된 경우는 법인등기부등본의 자본금을 확인하여 등록기준을 판단하면 될 것으로 판단됨

## 2 지하수개발·이용 시공업의 등록 기준 (1)

---

### 질의요지

- 법인설립 목적에 지하수개발·이용 시공업이 들어가 있지 않는다면 시공업 등록이 불가능한지?
- 건설기술관리법 및 엔지니어링기술진흥법에 의한 건축특급기술자도 지하수 개발·이용 시공업 등록시 기준이 되는 기술 인력에 해당되는지?

### 답변

- 지하수개발·이용 시공업의 등록은 지하수법 제22조, 동 시행령 제32조, 동 시행규칙 제25조에 의한 기술인력, 장비, 자본금 등 등록기준을 충족하면 가능함
- 건축특급기술자는 지하수개발·이용 시공업 등록기준의 기술 인력에 해당되지 않음

### 관련법령

- 지하수법 제22조
- 지하수법 시행령 제32조
- 지하수법 시행규칙 제25조

### 3 지하수개발·이용 시공업의 등록 기준 [2]

---

#### 질의요지

- 대한전문건설협회로부터 지하수관련분야에 5년 이상 종사 확인을 받은 경우 지하수개발·이용 시공업 등록시 기술 인력으로 인정받을 수 있는지?

#### 답변

- 지하수법 시행령 별표4(지하수개발·이용 시공업 등록기준)에서는 “지하수 관련 분야의 공사실무에 5년 이상 종사한 자로서 국토교통부장관이 인정하는 사업자단체로부터 그 사실여부를 확인 받은 자”로 규정하고 있음. 따라서 한국지하수·지열협회, 대한전문건설협회 등 국토교통부장관이 인정하는 사업자단체로부터 지하수분야 공사실무경력 5년 이상 종사한 사실을 확인 받은 경우에는 지하수개발·이용 시공업 등록기준의 기술 인력에 해당됨

#### 관련법령

- 지하수법 시행령 [별표 4]

## 4 지하수개발·이용 시공업 등록 기준 (3)

---

### 질의요지

- 지하수개발·이용 시공업 등록시 시추인정기능사도 자격요건이 되는지?

### 답변

- 시추인정기능사는 대한전문건설협회에서 발급하는 경력증으로서 지하수법 시행령 별표4(지하수개발·이용 시공업 등록기준) 1호 나목에 해당이 될 경우 지하수개발·이용 시공업의 기술인력 요건이 될 수 있음
- 따라서 대한전문건설협회로부터 받은 (시추) 인정기능사 경력증으로 지하수 개발·이용 시공업을 등록하기 위해서는 지하수분야에 실제 종사한 실무경력에 한하여 5년 이상 근무한 경력이 확인되어야 할 것으로 판단됨

### 관련법령

- 지하수법 시행령 [별표 4]



### 질의요지

- 지하수법 시행령 [별표 4] 1호 나목의 “국토해양부장관이 인정하는 사업자 단체”에 대한전문건설협회도 해당이 되는지?
- 지하수법 시행령 [별표 4] 1호 나목의 “지하수 관련 분야”라는 말이 보링·그라우팅 부분에 종사한 경력의 5년 이상일 경우도 해당되는지? 대한전문건설협회로 부터 보링,그라우팅에 종사한지 5년이 되었다는 경력증명을 받으면 지하수개발·이용 시공업 기술인력의 요건을 충족할 수 있는지?

### 답변

- 대한전문건설협회도 국토교통부장관이 인정하는 사업자 단체에 해당이 되므로 대한전문건설협회로부터 지하수 관련 분야의 공사 실무에 5년 이상 종사한 사실 여부를 확인 받으면 가능함
- 보링·그라우팅에 종사한 경력 전체를 지하수 관련 분야로 인정하는 것이 아니라 보링·그라우팅 종사 경력 중 지하수 관련 분야만 인정 가능하므로, 대한전문건설협회로부터 보링·그라우팅에 5년 종사한 경력증명이 실제 지하수 관련 분야의 공사실무에 5년 이상 종사하였는지 여부를 판단하여야 하는 사항임

### 질의요지

■ 지하수 지질조사 목적의 굴착행위를 위해 건설업 등록이 필요한지?

### 답변

- 건설산업기본법 제9조에 건설업을 영위하려는 자는 업종별로 등록을 하도록 규정하면서 같은 법 시행령 제8조에서 규정하고 있는 경미한 건설공사를 업으로 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건설산업기본법 제2조제4호에서“건설공사”라 함은 토목공사·건축공사·산업설비공사·조경공사 및 환경시설공사등 시설물을 설치·유지·보수하는 공사, 기계설비 기타 구조물의 설치 및 해체공사로 규정하고 있으며, 같은 법 시행령 별표1에 건설업의 업종과 업종별 업무내용을 규정하고 있음
- 따라서 지하수 지질조사를 위한 굴착행위시 건설업 등록이 필요한지 여부는 위 규정을 토대로 해당 지질조사 영역의 설계내용, 기술상의 특성 및 작업 방법, 현장여건 등을 감안하여 당해 영역을 설계한 발주자가 판단하여야 할 사항임

### 관련법령

- 건설산업기본법 제2조, 제9조

### 질의요지

- 개인사업자로서 이미 타 시군에서 지하수개발·이용시공업 등록을 하고 영업 중인 자(지하수개발·이용 시공업 대표자)가 개인으로 지하수개발·이용 시공업 신규 등록을 제출할 경우 지하수개발·이용시공업 등록기준에 적합할 경우 민원서류 접수 및 처리 등 제한이 없는지?

### 답변

- 지하수개발·이용 시공업 등록기준에 대해, 동일한 대표자가 타 지역에도 등록기준을 갖추어 등록할 경우에 대한 제한규정은 별도로 두고 있지 않음
- 따라서 "기 등록한 업체가 다른 지역에서도 사무소를 개설하여 지하수개발·이용 시공업을 하고자 한다면, 해당 사무소 소재 관할 시장·군수·구청장에게 기술인력, 시설 등을 갖추어 등록하면 가능할 것으로 보임

### 질의요지

- 지하수개발·이용 시공업이나 지하수 영향조사기관의 경우 지하수 기술인력 및 임원 변경사항이 있을시 꼭 변경신고를 해야 하는지?
- 변경신고로 인해 기술 인력이 미확보 되었을 때는 어떻게 해야 하는지?
- 지하수개발·이용 시공업과 지하수영향조사기관을 같이 운영할 경우 기술 인력을 중복으로 사용할 수 있는지?

### 답변

- 지하수법에 따라 등록한 지하수개발·이용 시공업은 동법 시행령 제32조 제4항에 따라 대표자 또는 임원(지하수개발·이용 시공업의 등록을 한 지하수조사전문기관의 대표자 또는 임원을 제외한다)이 변경되는 경우, 지하수영향조사기관은 동법 시행령 제38조 제6항에 따라 대표자 또는 임원(지하수영향조사기관의 등록을 한 지하수조사전문기관의 대표자 또는 임원을 제외한다)이 변경된 경우에는 변경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1월 이내에 변경 등록을 신청하여야 함
- 지하수영향조시기관의 등록기준 중 기술 인력은 지하수법 시행령 제38조 제1항 별표6에 규정하고 있는 사항을 충족하여야 하며, 등록요건에 미달하게 된 경우 동법 제29조 제1항 제2호에 의해 등록취소 사유에 해당됨
- 지하수개발·이용 시공업은 지하수개발을 전문으로 하는 업체를 육성하여 지하수개발의 전문화를 도모하고 책임시공을 확보하기 위한 제도이며, 지하수영향조사업은 지하수개발·이용이 주변 지하수 등에 미치는 영향을 조사하여 지하수장해를 사전에 예방하기 위한 것으로 등록의 목적과 업무내용이 상이하므로, 지하수의 적절한 개발·이용과 효율적인 보전·관리를 위한

업무를 수행하기 위해 제정한 지하수법의 입법취지로 볼 때 지하수법 시행령 제32조 제3항 규정에 의한 지하수개발·이용 시공업 등록과 동법 시행령 제38조 제1항 규정에 의한 지하수영향조사기관의 등록기준 중 기술능력은 각각 확보하는 것이 맞다고 판단됨

## 관련법령

▣ 지하수법 시행령 제32조, 제38조

## 9 시공업 장비 임대

---

### 질의요지

- 기존 지하수법에 의해 시설 및 장비를 갖추어 지하수개발·이용 시공업 등록을 득한 업체가 신규 시공업체에게 장비를 임대 해주는 것이 가능한지?

### 답변

- 현행 지하수법에 지하수개발·이용 시공업 등록시 장비에 관해서는 착정장비를 갖추고 있거나 착정장비의 소유자와 임대계약을 체결한 경우에는 갖춘 것으로 보고 있으며, 그 외에는 별도의 규정을 두고 있지 않음

## 10 시공업 변경등록

### 질의요지

- 지하수개발·이용 시공업의 변경등록을 하고자 하는데 주된 사무소를 이전하고자 할 경우 변경등록 신청을 현재 등록되어 있는 관청에 해야 하는지? 아니면 이전하고자 하는 곳의 관청에 해야 하는지?
- 등록사항 변경은 발생한 후 1개월 이내에 하도록 되어 있으나 하지 않았을 경우 처벌조항과 행정처분은 어떻게 되는지?

### 답변

- 주된 사무소를 다른 시·군으로 이전할 경우에는 당초 지하수개발·이용 시공업 등록 시·군에 변경등록을 신청하며, 변경등록을 받은 시·군에서는 변경등록 처리 후 등록관련 서류를 이전하고자 하는 지역의 시·군에 이관하여야 함. 변경등록 수수료는 변경등록을 신청한 당초 등록 시·군에 납부하면 가능함
- 지하수법 시행령 제32조 제5항에 의하면 변경등록 신청은 그 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1개월 이내에 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며, 변경등록을 규정에 따라 하지 않았을 경우에는 지하수법 제37조의3제10호에 따라 벌칙대상에 해당됨

### 관련법령

- 지하수법 시행령 제32조

## 11 지열냉난방 시설의 착정공사에 필요한 자격 조건

### 질의요지

- 지하수개발·이용 시공업자가 지하수를 뽑아 쓰지 아니하는 지열냉난방 시설의 착정공사를 할 수 있는지?

### 답변

- 지하수법 제22조제2항에는 “지하수개발·이용 시공업자가 아니면 지하수개발·이용 시설의 공사를 할 수 없다”고 규정하고 있으나, 단서로 그러지 아니하는 경우를 두고 있음

질의한 공사는 단서로 정한 그러지 아니하는 경우에 해당되며, 또한 건설산업기본법 시행령 제7조 [별표1]에서 “지열공 착정공사”는 전문공사 업종 중 “보링·그라우팅시공사업”을 등록한 자가 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음

- 따라서, 지하수개발·이용 시공업자가 지하수를 뽑아 쓰지 아니하는 지열냉난방 시설의 착정공사를 하기 위해서는 건설산업기본법에 따른 “보링·그라우팅 시공사업” 등록이 필요한 것으로 판단됨

### 관련법령

- 지하수법 제22조제2항
- 건설산업기본법 시행령 제7조



## 12 펌프 설치·교체 공사에 필요한 자격 조건

---

### 질의요지

- 지하수 수중모터펌프 설치 및 교체공사는 지하수개발·이용 시공업자만이 할 수 있는지?

### 답변

- 지하수법 제2조 제4호에서 “지하수개발·이용 시공업”이라 함은 지하수개발·이용을 위한 시설(이하 “지하수개발·이용시설”이라 한다)을 시공하는 사업으로 정의하고 있으며, 여기서 지하수개발·이용시설이라 함은 지하수개발·이용을 위한 일체의 시설을 의미함
- 지하수법 제22조 제2항에서는 “지하수개발·이용 시공업자가 아니면 지하수개발·이용시설의 공사를 할 수 없다”라고 규정하고 있으므로, 지하수 수중모터펌프를 설치하는 행위는 지하수개발·이용 시설의 일부 공정에 해당되므로 지하수개발·이용 시공업자만이 가능하다고 판단됨

### 관련법령

- 지하수법 제2조제4호, 제22조제2항

## 13 시공업 대표자 변경

---

### 질의요지

- 개인사업자로 신고된 시공업체의 대표자 변경시 신고 방법은?

### 답변

- 개인사업자로 신고된 업체에 있어 대표자는 모든 소유권과 책임을 가지고 있으므로 대표자가 변경되면 기존 업체가 다른 업체에게 양도되는 것으로 봐야할 것으로 판단됨
- 따라서 개인사업자로 신고된 시공업체의 대표자 변경은 지하수법 제24조에 의해 지하수개발·이용 시공업 양도·양수 신고를 하여야 하며, 이때 시설·장비의 보유현황 등의 구비서류를 제출하여야 함

### 관련법령

- 지하수법 제24조

## 14 주된 사무소 이전시 행정처분 주체

---

### 질의요지

- 지하수개발·이용 시공업체가 A군에서 B시로 사무소를 이전 하였을 경우 타 지역 업체를 A군에서 등록취소 및 과태료 등을 부과할 수 있는지?

### 답변

- 시공업체에 대한 등록관리 업무는 지하수법 제22조 제1항에 따라 지하수개발·이용 시공업체의 주된 사무소의 소재지를 관할하는 시·군에서 하게 되어 있으므로, 질의하신 등록취소 및 등록 관련 과태료 부과 건에 대하여는 시공업체의 주된 사무소의 소재지를 관할하는 시·군에서 하여야 하는 사항임

### 관련법령

- 지하수법 제22조

## 15 사후관리 시행에 필요한 자격조건

---

### 질의요지

- 지하수 사후관리를 지하수개발·이용시공업이 없는 사업자가 시행 가능한지?

### 답변

- 지하수법 제22조 제2항에 따라 동력장치를 쓰지 않거나, 경미한 공사를 시행하는 경우를 제외한 지하수개발·이용 시설의 사후관리는 지하수 개발·이용 시공업자만이 할 수 있음

### 관련법령

- 지하수법 제22조제2항

## 16 온천공 개발공사 시행에 필요한 자격조건

### 질의요지

■ 지하수 온천공 개발공사를 하려면 어떤 면허를 발급 받아야 하는지?

### 답변

■ 지하수법 제22조 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지하수개발·이용 시공업을 하려는 자는 지하수개발·이용 시공업 등록을 하여야 하며, 지하수개발·이용 시공업자가 아니면 지하수개발·이용시설의 공사를 할 수 없음

온천공 또한 지하수 개발·이용 시설이므로, 온천공 개발공사를 하기 위해선 지하수법에 따라 지하수개발·이용 시공업을 등록해야 함

이와 별개로, 해당 공사가 건설산업기본법에 따라 건설업으로 등록된 자만이 할 수 있는 공사에 해당된다면, 그 공사를 하기 위해선 해당 건설업 등록도 필요함

### 관련법령

■ 지하수법 제22조

### 질의요지

- 직무분야에서 토목은 특급기술자이나, 전문분야에서는 토질 및 기초가 고급, 수자원개발은 초급인 경우 지하수영향조사기관 등록기준의 기술능력에 해당되는지?

### 답변

- 귀하께서 질의하신 바와 같이 직무분야(토목)에서는 특급기술자이면서 전문분야(토질 및 기초, 수자원개발)에서는 특급기술자가 아닌 경우에는 지하수법 시행령 별표5의 기술능력 '나'항목에는 해당되나, '가'항목에는 해당되지 않음

따라서 지하수영향조사기관 등록기준에 부합하기 위해서는 '가'항목에 해당하는 「국가기술자격법」에 따른 지질 및 지반, 수자원개발, 상하수도 또는 농어업토목 기술사 1명 이상(대학의 연구소인 경우에는 해당 분야의 박사 1명 이상을 말한다)이나 「건설기술관리법」 또는 「엔지니어링산업 진흥법」에 따른 해당 분야의 특급기술자 1명 이상이 추가로 필요함

### 관련법령

- 지하수법 시행령 [별표 5]

## 18 기술인력의 중복 등록 등

---

### 질의요지

- 지하수개발·이용 시공업 등록이 되어 있는 업체가 지하수 영향조사 기관을 등록하려고 할 때 기술인력 중복이 가능한지?
- 영향조사기관 등록 신청시 개인사업자가 제출하는 “설립근거를 증명할 수 있는 서류”는 어떤 서류인지?

### 답변

- 지하수개발·이용 시공업 등록기준과 지하수 영향조사 기관 등록기준에서 필요로 하는 기술 인력은 중복이 불가하며 각각 확보하여야 할 것으로 사료됨
- 지하수법 시행령 제38조 제1항에 의하면, “지하수영향조사기관으로 등록을 할 수 있는 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로서 별표6의 기술 능력 및 시설·장비를 갖추어야 한다.” 라고 규정하고 있으며, 이를 증명할 수 있는 서류를 제출하시면 될 것으로 판단됨

### 관련법령

- 지하수법 시행령 [별표 6]

## 19 영향조사기관의 기술인력 등록

---

### 질의요지

- 지하수영향조사기관의 등록기준을 초과하는 기술 인력을 등록해야 하는지?
- 최초 등록시 포함되지 않았던 기술 인력을 중간에 추가로 등록하는 것이 가능한지?

### 답변

- 지하수법 제27조에 따라 지하수영향조사업무를 하려는 자는 시장·군수·구청장에게 등록하여야 하며, 동법 시행령 제38조 제3항에 따라 등록신청을 받은 시장·군수·구청장은 등록기준에 맞지 않는 경우 등의 특별한 결정사유가 없으면 등록을 해주어야 함

따라서, 지하수영향조사기관 등록시 등록기준을 초과하는 기술 인력을 모두 등록할 의무는 없음

- 등록한 기술인력이 변경되었을 경우 지하수법 제27조 및 동법 시행령 제38조에 따라 그 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50일 이내 변경등록을 신청하여야 함

### 관련법령

- 지하수법 제27조
- 지하수법 시행령 제38조



### 질의요지

- 지하수영향조사기관의 등록취소 사유 중에 지하수영향조사에 대한 실적이 포함되어 있는지?

### 답변

- 지하수영향조사기관의 등록취소 사유는 지하수법 제29조에 규정하고 있으며, 지하수영향조사의 실적 유무는 지하수영향조사기관의 등록취소 사유에 해당되지 않음

### 관련법령

- 지하수법 제29조

## 21 영향조사기관의 등록 취소 처분 주체

---

### 질의요지

- 'A지역 행정청'에 등록된 지하수영향조사기관이 'B지역 행정청'에 제출한 지하수영향조사서를 중대한 과실로 부실하게 한 경우 등록취소 및 청문은 어느 행정청에서 하여야 하는지?

### 답변

- 지하수법 제27조 제1항에 의해 지하수영향조사기관의 등록은 주된 사무소의 소재지를 관할하는 시장·군수·구청장에게 하여야 하므로, 지하수법 제29조 제1항에 따른 등록취소 등을 포함한 지하수영향조사기관의 등록관리 업무는 사무소가 소재한 관할 지자체에서 해야 할 것으로 판단됨

### 관련법령

- 지하수법 제27조, 제29조

## 22 법정 교육 대상

---

### 질의요지

- 지하수정화업 교육훈련 대상자의 경우 1년 이내에 법정교육을 받았으면 추후 재교육을 받아야 하는지?
- 기술 인력 모두 법정교육을 받은 뒤 1년이 경과한 후 기술 인력의 변경이 있을 경우 변경된 기술인력 또한 기술 인력으로 등록된 후부터 1년 이내에 교육을 받아야 하는지?

### 답변

- 법정교육을 받은 기술 인력은 재교육을 받지 않아도 됨
- 변경된 기술 인력이 지하수법 제34조의2에 의한 법정교육을 이미 받은 경우에는 변경등록 후 다시 교육을 받을 필요는 없으며, 법정교육을 받지 않은 경우에는 변경등록한 날부터 1년 이내에 받아야 함

### 관련법령

- 지하수법 제34조의2
- 지하수법 시행령 제42조



지하수법령 질의회신집

VII

## 불법 지하수 시설



## 질의요지

- 지하수법이 정비되면서 법 제정 이전에 개발된 관정들이 현장조사 및 지자체에서 관리하고 있는 대장상으로 미등록된 것이 다수 존재하고 있는데, 이들 관정에 대하여 법제정 이전에 설치된 시설이므로 법적인 관리를 받지 않아도 되는지?

(유사질의)

- 미등록 지하수시설 대상으로 일제조사를 시행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 일제조사를 통해 양성화 기회가 주어진 것만으로 법 제정 이전의 관정들 중 양성화되지 못한 시설물은 현행법으로 제재할 수 있는지?

## 답변

- 1993년 지하수법이 제정되면서 법 시행 이전에 이미 지하수를 개발·이용하고 있던 시설에 대하여는 법 시행일로부터 3월 이내에 신고하도록 규정하였으며, 지하수법 시행 이후에도 신고를 하지 않은 시설에 대한 제도권 내 흡수를 위해 2000년도에는 자진신고기간을 운영한 바 있음
- 따라서 법 제정 이전의 관정들 중 지하수법 시행당시 신고를 하지 않았거나 자진신고 기간 중 신고를 하지 않고 사용 중에 있는 시설은 현행 지하수법상 불법시설물로 간주되어 원상복구 명령 등의 조치를 취할 수 있으며, 벌금 및 과태료 대상이 됨

## 2 자진신고 시설의 현장 확인

---

### 질의요지

- 불법 지하수시설 자진 신고시 담당공무원의 현장 확인 절차를 현장사진 확인으로 갈음할 수 있는지?

### 답변

- 자진신고를 하게 되면 최종적으로 담당공무원이 현장 확인 후 준공확인 필증을 교부하도록 하고 있으나, 자진 신고시 여건상 현장 확인이 어렵다고 판단되는 경우 불법 지하수 시설 자진신고기간 운영 업무수행요령에 따라 현장사진 확인으로 갈음할 수 있도록 하고 있음

### ※ 참고자료

- 불법 지하수 시설 자진신고기간 운영 업무수행 요령(2010.9, 국토해양부)



### 3 불법 지하수 시설의 처리

---

#### 질의요지

■ 불법 지하수 시설에 대한 법적 구제 방안은?

#### 답변

■ 현행 지하수법상 미신고시설은 원상복구 및 과태료 부과 대상에 해당이 되며, 이에 대한 예외사항으로는 귀하의 지하수 시설물이 허가대상이 아닌 신고대상일 경우에는 지하수법 제15조 제2항제2호에 따라 시장·군수·구청장이 원상복구를 명하기 전에 지하수법에 따라 신고한 경우에는 원상복구를 하지 않고 계속해서 지하수를 이용할 수 있음

그러나 이 경우에도 지하수법 제40조 제1호에 의한 과태료 부과 대상에는 해당됨

■ 한편, 우리부에서는 불법 지하수 시설을 양성화하기 위해 “불법 지하수 시설 자진신고기간 운영”을 실시하고 있으며, 자진신고 기간에 자진신고 시 지하수시설을 양성화하여 사용 가능함

#### 관련법령

■ 지하수법 제15조, 제40조

### 질의요지

- 지하수법에 의거 굴착신고서를 제출하고 지하수영향조사를 완료하여 허가 필증까지 받았으나 약 2년간 준공신고를 하지 못한 경우 자진신고에 의해 양성화할 수 있는지?
- 굴착신고를 하지 않고 지하수개발을 하였을 경우 자진신고기간에 양성화 할 수 있는지?

### 답변

- “불법 지하수 시설 자진신고기간 운영”시 자진신고 대상은 공고한 바와 같이 “지하수법 제7조에 따른 허가를 받지 않았거나 동법 제8조에 따른 신고를 하지 않고 지하수를 개발·이용하는 자”가 해당되므로, 이미 허가필증을 받은 경우에는, 자진신고 대상에 해당되지 않음
- 질의 내용과 같이 허가를 받은 후 약 2년간 공사를 하지 않은 경우라면, 지하수법 제10조 제1항 제5호에 따라 허가가 취소될 수도 있음
- 굴착신고를 하지 않고 개발한 지하수 또한 자진신고 대상에 해당됨

## 5 자진신고 처리 갯수

---

### 질의요지

- 동일소유자의 필지에 있는 불법 지하수 시설의 자진신고를 몇 개까지 할 수 있는지?

### 답변

- 질의하신 내용과 같이 여러 개의 불법 지하수 시설이 있는 경우 자진신고에 대한 개수 제한은 없으므로 모두 자진신고를 할 수 있음

### 질의요지

- 민원신고로 접수된 불법 지하수 시설에 대하여 자진신고 기간을 이용하여 양성화가 가능한지?
- 실제 토지 소유자가 아닌 지하수 시설 사용자에게 신고의 의무가 있는지?

### 답변

- 민원 신고로 접수된 불법 지하수 시설이더라도 자진신고 기간을 이용하여 양성화가 가능하며, 지하수를 실제로 이용하고자 하는 자는 자진신고에 필요한 구비서류를 갖추어 신고하면 됨
- 원칙적으로 지하수를 불법으로 개발한 자와 현재 불법으로 이용 중에 있는 자 모두에게 지하수개발·이용 신고의 의무가 있으며, 신고하지 않고 사용 시 과태료 부과대상에 해당됨

### 관련법령

- 지하수법 제8조

### 질의요지

- 지하수 시설을 불법으로 개발·이용시 어떻게 처리하면 되는지?

### 답변

- 지하수법 제7조에 따른 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지하수를 개발·이용하였다면 동법 제37조에 따라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고, 동법 제8조에 따른 신고를 하지 아니하였다면 동법 제39조에 따라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음

### 관련법령

- 지하수법 제37조, 제39조



지하수법령 질의회신집

VIII

---

---

## 지하수개발 · 이용부담금

---

---





## 1 부담금 부과 근거 및 기준

---

### 질의요지

- 지하수개발·이용부담금의 부과근거는 무엇이며, 부과시기 및 방법은 어떻게 되는지?
- 이용부담금 부과기준은 어떻게 되는지?

### 답변

- 지하수이용부담금의 부과는 지하수법 제30조의2, 제30조의3에 의거 관할 시장·군수·구청장이 부과하고 있으며, 부과시기 및 방법은 지하수법 제30조의3 제3항에 의해 시·군별로 지하수 조례를 제정하여 부과시기 및 방법을 정하고 있음
- 부과기준은 지하수법 제30조의3에 따라 지하수법 제7조 및 제8조에 의해 규정에 의하여 허가를 받거나 신고를 하고 지하수를 개발·이용하는 자에게 “한강수계 상수원 수질개선 및 주민지원 등에 관한 법률”에 의한 물 이용부담금 상당액의 50/100의 범위 안에서 지하수 취수량, 용도 등을 고려하여 시·군 또는 자치구의 조례로 정하고 있음

### 관련법령

- 지하수법 제30조

## 2 부담금 부과 대상 (1)

---

### 질의요지

- 정상적으로 허가나 신고를 취득하고 지하수를 이용할 경우에도 이용부담금을 납부하여야 하는지?

### 답변

- 지하수의 개발·이용은 반드시 허가를 받거나 신고를 하여야 사용가능하며, 지하수이용부담금 부과 대상시설은 지하수법 제 30조의3에 따라 시장·군수·구청장이 정하고 있으므로, 해당 지하수 시설이 이용부담금 부과대상에 해당이 되는지 여부는 관할 시·군을 통해 확인해야 할 것으로 판단됨

### 관련법령

- 지하수법 제30조의3

### 3 부담금 부과 대상 (2)

#### 질의요지

- 준공신고를 완료한 지하수 시설만 지하수부담금을 납부하는지?
- 지하수개발·이용부담금 부과징수에 따른 검침내역 입력기준은?

#### 답변

- 지하수 이용부담금은 허가를 받거나 신고를 한 후 준공확인 필증을 받은 시설에 대하여 부과함
  - ※ 지하수개발·이용부담금은 허가를 받거나 신고를 하고 지하수를 개발·이용하는 자에게 부과하는 것으로, 지하수개발·이용은 허가를 받거나 신고를 한 후에 이행보증금의 예치, 준공신고, 준공검사를 거쳐서 준공확인 필증을 관할 관청에서 발급받아야 가능
- 한편, 준공절차를 위반시에는 적법한 시설이라 할 수 없으며, 허가의 취소 등 불이익이 있을 수 있음
- 지하수법 제30조의3 제3항에 의하면 지하수이용부담금의 세부적인 산정방법, 부과·징수방법 및 납입절차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시·군 또는 자치구의 조례로 정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므로, 검침내역 입력기준 등 세부적인 사항에 대하여는 관할 시·군을 통해 확인해야 할 것으로 판단됨

#### 관련법령

- 지하수법 제30조의3

## 4 부담금 부과 대상 (3)

---

### 질의요지

- 지자체로부터 비상급수 민간지정 업체로 지정되어 있는 경우 지하수이용부담금 부과 면제 대상이 되는지?

### 답변

- 지하수법 제30조의3 제1항 제1호에 따라 지하수법 제8조제1항제4호의 "전시 기타 비상사태의 발생에 대비하여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비상급수용으로 지하수를 개발·이용하는 경우"는 지하수이용부담금 부과대상이 아님
- 그러나 개인이 지하수를 개발하여 평상시 이용 중인 시설을 지자체에서 비상급수 시설로 지정한 경우는 지하수법 제30조의3 제1항 제1호에 의한 지하수개발·이용부담금 부과 제외 대상에 해당되지 않음

### 관련법령

- 지하수법 제30조의3

## 5 부담금 부과 대상 (4)

---

### 질의요지

- 하천구역 내 하천바닥에 흐르는 물을 사용하기 위해 하천법에 따라 하천점용허가(유수의 점용)를 받은 시설에 대해 지하수법에 따른 인허가 완료 후 지하수이용 부담금을 부과할 수 있는지?

### 답변

- 지하수이용부담금은 지하수법 제30조의3에 따라 지하수의 적절한 개발·이용과 보전·관리에 필요한 재원을 마련하기 위해 지하수법에 따라 허가를 받거나 신고를 하고 지하수를 개발·이용하는 자에게 부과·징수하도록 규정하고 있음

따라서 다른 법률의 규정에 따라 허가·인가 등을 받거나 신고를 하고 지하수를 개발·이용하는 자에게 지하수이용부담금을 부과할 수 없음

- 또한, 하천법에 의한 하천구역 내에서 하천바닥에 흐르는 물을 사용하기 위해서는 하천법에서 규정하고 있는 인·허가를 득하여야 할 것으로 판단됨

### 질의요지

- 지하수법 제30조의3에 의거 지하수개발·이용자에게 부과하는 지하수이용 부담금과 지방세법 제141조 지역자원시설세가 이중과세에 해당되는 것이 아닌지?

### 답변

- 지하수법 제30조의3 제1항에서는 지하수의 적절한 개발·이용과 보전·관리에 필요한 재원을 조성하기 위하여 지하수이용부담금을 부과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으며, 동법 제30조의3 제3항에서는 지하수이용부담금의 세부적인 산정방법, 부과·징수 방법 및 납입절차 등의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시·군 또는 자치구의 조례로 정하도록 규정하고 있음
- 지방세법 제141조 지역자원시설세와 지하수법 제30조의3의 지하수이용부담금 중복적용 문제는 해당 지자체에서 자치구의 조례 및 개별 법령의 취지 등을 검토하여 적용 여부를 판단하여야 할 것으로 사료됨

### 질의요지

- 여러 관정을 사용하는 곳에서 유량계를 개별 관정이 아닌 관정 배관이 모이는 곳에 통합 유량계를 설치하여 이용부담금을 납부해도 되는지?

### 답변

- 지하수법 시행규칙 제5조 제1항에 따른 적산유량계의 설치는 지하수의 취수현황을 파악을 위한 것으로 개별 관정에 설치하여야 함

### 관련법령

- 지하수법 시행규칙 제5조제1항





지하수법령 질의회신집

IX

기타



## 1 유량계 고장시 교체 절차

---

### 질의요지

- 지하수 유량계 고장으로 인해 사용자가 임의로 교체하였을 경우 처벌이 가능한지?

### 답변

- 지하수법 시행령 제25조제3항에 의하면, “지하수오염방지의무자는 적산유량계의 봉인이 훼손되었거나 고장 등의 사유로 유량계를 교체 또는 수리하여야 하는 경우에는 국토해양부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시장·군수·구청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라고 규정하고 있으며, 동 시행규칙 제20조의2에 의하면, “지하수오염방지의무자는 영 제25조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적산유량계를 교체·수리하여야 하는 경우에는 지체 없이 전화 등의 방법으로 시장·군수·구청장에게 그 교체·수리의 신고를 하여야 한다.”라고 규정하고 있음
- 하지만 과태료 등 처벌규정과 관련하여서는 현행 지하수법에는 이용자가 임의로 유량계를 교체하였을 경우의 처벌에 관한 사항은 별도로 규정하고 있지 않음

## 2 적산유량계 미설치에 대한 처벌

---

### 질의요지

■ 적산유량계 미설치에 대한 처벌규정이 있는지?

### 답변

■ 지하수법 시행규칙 제5조에 따라, 양수능력이 일 30톤 미만(토출관 안쪽지름 30mm인 경우만 해당)인 경우 등을 제외하고는 적산유량계를 설치하여야 하며, 적산유량계의 봉인훼손 및 고장이 발생한 경우는 즉시 시장·군수·구청장에게 신고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나, 이를 이행하지 않은 것에 대한 처벌규정은 없음

### 3 비상급수용 지하수 시설의 유량계 설치 여부

---

#### 질의요지

- 비상 급수용 지하수개발·이용 시설의 경우 적산유량계를 설치하지 않아도 가능한지?

#### 답변

- 지하수법 시행령 제5조 제1항 및 제3항에 따르면, 지하수법 제8조 제1항에 따라 신고를 한 경우로서 시장·군수·구청장이 지하수개발·이용시설의 설치기준을 따르는 것이 부적절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설치기준을 완화하여 적용할 수 있고, 지하수의 개발·이용량 및 수위를 측정할 필요가 없다고 인정하는 시설의 경우에는 적산유량계의 이용량 측정을 하지 않을 수 있으므로, 문의하신 시설이 이에 해당되는지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 관련법령

- 지하수법 제5조

## 4 지하수 보전구역 지정 현황

### 질의요지

- 지하수법 제12조에 “지하수보전구역의 지정”이 있는데 실제로 보전구역으로 지정된 곳이 있는지? 있다면 어디인지?

### 답변

- 우리나라의 지하수보전구역은 현재, 전남 무안군 1개 지구와 충남 당진시 1개 지구가 지정되어 있음

#### 【지하수보전구역 지정 현황】

구 분	무안읍 지반침하지구 지하수보전구역	합덕 지하수보전구역
위 치	전남 무안군 무안읍 성내리, 성남리, 성동리 일원	충남 당진시 합덕읍 석우리, 성동리, 운산리, 소소리 일원
지정일	2002. 4. 3.	2005. 10. 12
근 거	지하수법 제12조	지하수법 제12조
면 적	0.32km <sup>2</sup>	0.51km <sup>2</sup>
지 정 사유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지하수 과다사용으로 지하수위가 강하하면서 석회규산염암으로 형성된 파쇄암의 하부지반에 하중이 집중되어 지반침하가 발생함</li> <li>- 지하수 과다사용으로 인한 지반침하 및 지반함몰을 방지하여 주민의 인명 및 재산을 보호하기 위함</li> </ul>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당진시 합덕읍 석우천 주변은 용수원이 풍부하고 대수층이 잘 발달된 지역으로 공공급수용 지하수시설에 대하여 지하수 수질 오염을 사전에 방지하고 안정적인 취수 도모</li> </ul>
효 과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지하수개발·이용을 억제함으로써 지반침하 및 지반함몰을 방지함은 물론 주민의 인명 및 재산 보호</li> </ul>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과도한 지하수개발·이용과 수질 오염 행위 사전방지 및 안정적인 용수공급 체계 구축</li> </ul>

자료) 지하수관리 기본계획(2012, 국토해양부)

### 질의요지

- 온천보호구역에 위치한 일반음식점에서 인접한 건물에서 기 개발하여 사용하고 있는 지하수를 공동으로 이용할 수 있는지?

### 답변

- 귀하께서 사용하시고자 하는 지하수의 용도와 인접 건물에서 사용하고 있는 지하수의 용도가 같다면 명의변경 등을 통해 가능한 것으로 보이며, 지하수법에는 공동명의 공동이용과 관련하여서는 적법한 절차를 이행하면 별도의 제한사항은 두고 있지 않음
- 다만, 귀하의 경우는 온천보호구역에서의 행위를 하는 것이기 때문에 온천법에 저촉이 되는지는 지자체 온천 관련 부서에 문의하시기 바람

### 질의요지

- 생활용수로 개발하여 먹는물 공동시설로 지정된 지하수 일부를 공업용으로 이용할 경우 지하수법 시행령 제11조 허가사항 변경에 해당되는지?
- 먹는물관리법 제8조 ‘먹는물공동시설’의 지하수 일부를 기업체에서 가져가 주류 제조공정의 원료로 사용했다면 먹는물관리법 제9조 샘물개발 허가대상 및 먹는물 관리법 제31조 수질개선부담금 부과 대상인지?

### 답변

- 지하수법 제7조에 의해 생활용수(음용)로 허가를 받은 시설을 먹는물관리법에 따라 먹는물공동이용시설로 지정한 경우로서 먹는물 공동이용시설을 공업용수(주류제조 공정의 원료)로 이용할 수 있는지 여부는 지하수법 제4조에 의해 먹는물관리법의 규정에서 정하는 바를 따라야 할 것으로 사료됨
- 먹는물 공동시설의 지하수를 주류제조 공정의 원료로 사용하기 위해서는 먹는물관리법에 따라 샘물개발 허가를 득하여야 할 것으로 사료되며 ,이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먹는물관리법을 관장하고 있는 환경부에 문의하기 바람

### 관련법령

- 지하수법 제4조
- 먹는물관리법 시행령 제3조



### 질의요지

- 신고를 하지 않고 사용 중인 소형 지하수 관정에서 나온 지하수를 판매할 수 있는지?

(유사질의)

- 지하수 개발자인 A사가 B사 등에 혼합음료 제조용으로 지하수를 판매하는 행위가 지하수법 위반에 해당하는지? 위반사항이라면 지하수법 무슨 조항을 적용해야 하는지?

### 답변

- 지하수는 공적자원으로 지하수법에 따라 허가를 받거나 신고를 한 후 사용할 수 있으며, 허가를 받거나 신고를 한 지하수를 판매하는 것은 지하수법에 별도로 규정하고 있지 않음

따라서 먹는물 관리법 등 타법에서 규정하는 사항을 준수하는 것이 맞다고 사료됨

- ※ 신고를 하지 않고 사용 중에 있는 시설은 현행 지하수법상 불법시설물로 간주되어 원상복구 명령 등의 조치가 취해질 수 있으므로, 해당 관정을 계속해서 사용하기 위해서는 지하수법 제15조 제2항 제2호에 따라 관할 지자체에서 원상복구를 명하기 전에 지하수법에 따라 신고를 하여야 함

### 질의요지

- 환경영향평가지 지하수개발·이용량(500톤/일)을 초과하여 지하수개발·이용허가(2,314톤/일)를 받은 경우 본 허가 신청행위가 지하수법 제10조 제1항 1호에 따른 부정한 방법으로 지하수개발·이용 허가를 받은 경우에 해당되는지?
- 지하수법 제10조 제1항 1호의 부정한 방법이란 어떤 행위가 해당되는지?
- 개발·이용자 측에서 취수량 제한사항(500톤/일)을 미 이행시 지하수법에 의한 제재사항이 있는지?

### 답변

- 지하수법 제4조에는 지하수의 개발·이용 등에 관하여 다른 법률에서 규정하고 있는 경우 그 법률을 따르도록 규정하고 있으므로 환경영향평가지 협의된 개발계획량을 초과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환경영향평가법 규정에 따라 판단할 사항임
- 지하수법 제10조제1항제1호의 부정한 방법이란 지하수개발·이용 신청서를 허위로 작성하거나 사실과 다른 내용으로 허가를 받은 경우 등을 의미함
- 지하수법 제37조의3에 따라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을 부과할 수 있음

### 관련법령

- 지하수법 제4조, 제37조의3

### 질의요지

- 지하수 개발·이용시설 공사시 공사대가 지급을 위한 지층 판단 기준은 어떻게 되는지?

### 답변

- 지하수시설 공사를 위한 착정시 지층분류는 발주청에서 공사 시방서 및 현장 제반여건 등을 감안하여 결정하여야 하며, 일반적으로 「건설공사 표준품셈」의 분류기준(점토층, 모래층, 자갈층, 호박돌층, 풍화암층, 연암층, 보통암층, 경암층, 극경암층)을 참고하고 있음
- 또한 화강암은 지질학적인 암석의 분류 기준으로 물리적 성질을 기준으로 분류한 암석의 기준(풍화암, 연암, 보통암, 경암, 극경암)과는 상이하오니 참고하시기 바람



**본 책자는 비매품이며, 대외적으로 사용·게재할 때에는 반드시  
발행처와 사전에 협의를 하여야 하며, 무단 복제를 금합니다.**

- 
- ☐ 책 자 명 : 지하수법령 질의회신집
  - ☐ 발행기관 : 국토교통부
  - ☐ 발 행 일 : 2014년 11월
  - ☐ 발 행 처 : 국토교통부 수자원정책과  
세종특별자치시 도움6로 11  
우편번호 : 339-012  
TEL : (044) 201-3599, 3600  
FAX : (044) 201-5691
-